

# 20세기 한·일 양국의 서로에 대한 연구 현황과 특성 분석\*

- 정치·경제분야의 단행본을 중심으로 -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Research Products of Each Other between Korea and Japan  
- With an Emphasis on the Political and Economic Fields -

이 제 환(Jae-Whoan Lee)\*\*

## 〈 목 차 〉

- |                        |                      |
|------------------------|----------------------|
| 1. 서론                  | 4. 경제분야 지식정보의 현황과 특성 |
| 2. 20C 한국과 일본의 정치·경제관계 | 4.1 시기별 현황과 특성       |
| 3. 정치분야 지식정보의 현황과 특성   | 4.2 주제별 현황과 특성       |
| 3.1 시기별 현황과 특성         | 4.3 생산주체별 현황과 특성     |
| 3.2 주제별 현황과 특성         | 5. 결론 및 제언           |
| 3.3 생산주체별 현황과 특성       |                      |

## 초 록

이 연구의 목적은 한일 양국이 20세기에 생산해낸 정치·경제 관련 연구의 현황과 특성을 조사하고, 그러한 연구가 양국의 정치·경제관계의 변화와 어떠한 상관관계를 갖고있는지를 '서지학적' 관점에서 논의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①20세기 한일간 정치·경제관계를 주요 사건과 쟁점을 중심으로 살펴본 후, ②한일 양국이 정치·경제분야에서 서로에 대해 생산한 연구물을 포괄적으로 수집하여 시기별·주제별·생산주체별 현황과 특성을 분석하였다. ③나아가, 한일 양국의 정치·경제관계의 변화와 생산된 연구물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였으며, ④마지막으로, 한국에서의 일본연구를 보다 진전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해 그 동안 생산해온 연구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주제어 : 한국, 일본, 한일관계, 지식정보, 연구물, 정치연구, 경제연구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lies in investigating the present state and characteristics of monographs produced by Korea and Japan, which are the research products on each other's political and economic situations for the period of 1901-2000. To this end, we identified the major political and economic events and issues in the Korea-Japan relations, also collected comprehensively the monographs produced by each country regarding each other, and analyzed the present state and characteristics of the monographs with a special emphasis on the publication period, subject matter and producer. Also identified wa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oduction of monographs and the Korea-Japan political and economic relations from a historical perspective. Finally, we suggested the necessity of a knowledge and information system for both effective management and efficient control of such research products.

Key Words : Korea, Japan, Korea-Japan relation, research products, politics, economics

\* 이 논문은 1998년도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KRF-98-005-C00479)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jwleeh@pusan.ac.kr)

· 접수일 : 2002. 5. 12 · 최초심사일 : 2002. 6. 4 · 최종심사일 : 2002. 6. 7

## 1. 서론

### 1.1 연구목적

관계는 관심에서 출발한다. 개인이나 집단은 물론이고 국가간의 관계 역시 서로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한다. 관심을 유발하는 요인은 다양하다. 생김새나 거주지와 같은 물리적 요인에서부터 인성이나 사고방식과 같은 인지적 요인 그리고 습관이나 풍습과 같은 감성적 요인에 이르기까지, 서로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물리적, 인지적, 감성적 측면에서 공통점이 클 때, 서로에 대한 관심은 인위적인 노력에 의해서 보다는 자연적인 현상으로 생성된다. 이렇듯 자연적으로 생성된 관심이 바람직한 관계로 발전하려면 무엇보다도 절실한 것이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다. 이해가 결여된 관심은 서로에 대한 오해를 낳고, 오해는 갈등과 반목의 씨앗이 되며, 궁극적으로 불행한 관계로 결과한다.

韓國과 日本. 물리적, 인지적 그리고 감성적 측면에서 그 어떤 나라보다도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이웃 나라이다. 따라서 한일 양국의 서로에 대한 관심은 인위적인 노력에 의해서 보다는 자연적인 현상으로 다가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보니, 양국 관계는 부정적 측면이 부각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한국과 일본은 협력을 통한 공존의 모색보다는 경쟁에 기반한 소모적인 갈등을 반복하여 왔으며, 급기야 20세기초에 들어서는 일본에 의해 한국이 물리적으로 점령당하고, 인지적으로 압박당하고 감성적으로 침탈당하는 최악의 관계를 경험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불행한 과거는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양국 관계의 발전을 가로막는 짐이요 멍에로 남아 있다.

한국과 일본이 서로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기 위해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은 다양하다. 국가차원의 공식적인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에서부터 민간차원의 비공식적인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안이 강구될 수 있다. 그러나 한일 양국이 서로에 대해 보다 근본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역사와 문화에서부터 사상과 종교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반에 걸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에 대한 피상적인 관찰만으로 서로를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피상적인 관찰에 기초하여 서로를 이해하려 할 때, 협조와 공존보다는 갈등과 반목이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에 의한 연구가 지속되고, 그러한 연구결과가 누적되어 서로에 대한 이해가 축적될 때, 양국 관계는 비로소 긍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된다.

그렇다면, 한국과 일본은 그 동안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얼마나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연

구해 왔을까? 나아가, 한일 양국이 서로에 대해 수행해 온 연구는 양국 관계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 이 연구는 이와 같은 의문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출발하였다. 이 연구는, 특히, 양국의 갈등과 반목이 첨예하던 20세기초에서부터 탈냉전시대를 맞아 새로운 관계의 정립을 모색하기 시작한 20세기말까지의 100년을 대상으로, 양국 관계에 있어 핵심 영역이라 할 수 있는 정치와 경제분야를 중심으로, 양국이 서로에 대해 생산해온 연구물을 추적하여 정리하고, 그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출발하였다. 이처럼, 이 연구의 목적은 한일 양국이 20세기에 생산해낸 정치·경제 관련 연구물의 현황과 특성을 조사하고, 나아가, 그러한 연구물들이 양국의 정치·경제관계의 변화와 어떠한 상관관계를 갖고있는지를 ‘서지학적’ 관점에서 논의하는데 있다.

## 1.2 연구내용과 방법

19세기 후반 일본의 對朝鮮 政策을 분석해 보면, 정책의 수립이 철저하고 전문적인 연구성과에 기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같은 시기에 조선의 對日本 政策은 ‘無정책이 정책’일 정도로 정부는 물론이고 민간차원의 대책이 전무함을 알게 된다. 이는 當時 조선이 일본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는커녕 일본에 대한 일반적인 현황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상대국에 대한 지식정보의 有無와 상대국에 대한 정책의 수립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특히, 정치와 경제분야에서 생산된 전문적인 지식정보자료는 상대국에 대한 외교와 통상정책 政策을 수립하는데 있어 결정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한다.

이렇듯 상대국에 대한 관심과 상대국에 대한 지식정보의 생산 사이에는, 그리고 상대국에 대한 지식정보의 생산과 상대국에 대한 정책의 수립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 이 연구의 기본적인 假定이다.

이러한 관점을 유지하면서, 이 연구에서는 ①20세기 한국과 일본의 정치·경제관계를 주요 사건과 쟁점을 중심으로 살펴본 후, ②한일 양국이 정치·경제분야에서 서로에 대해 생산한 연구물을 포괄적으로 수집하여 시기별·주제별·생산주체별 현황과 특성을 분석하였다. ③나아가, 한일 양국의 정치·경제관계의 변화와 생산된 연구물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④마지막으로, 한국에서의 일본연구를 보다 진전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해 그 동안 생산해온 연구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한편, 이 연구에서 수집 및 분석 대상으로 삼은 연구물의 유형은 출판의 형태를 빌어 생산된 ‘단행본’으로 한정하였으며, 단행본 중에서도 학술적 가치가 높다고 판단된 자료만을 선별하여 정리하였다.<sup>1)</sup> 수집 대상 단행본의 시기적 범위는 1901년부터 2000년까지 100년으로 한

정하였으며, 연구물의 주제는 정치분야(정치, 외교, 군사)와 경제분야(경제, 산업, 통상)로 제한하였다. 수집 대상 단행본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다양한 DB와 인쇄본 형태의 서지를 동시에 참고하였으며, 더불어,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방문조사와 관련 연구자와의 면담을 병행하였다. 서지 DB의 경우, 양국의 국가도서관 DB는 물론이고, 주요 대학이나 연구소의 DB 등을 망라적으로 탐색하였으며, 이러한 서지 DB에서 찾을 수 없는 소급자료나 회귀자료는 인쇄본 형태의 서지 자료를 망라적으로 수집하여 참고하였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수집한 단행본 중에서 해당 주제영역의 핵심 단행본으로 판명된 경우, 각 단행본의 참고문헌을 조사하여 해당 주제분야에서 생산된 주요 자료를 역으로 추적하는 작업도 병행하였다.<sup>2)</sup>

## 2. 20C 한국과 일본의 정치·경제 관계

解放이후 지속적으로 불거진 한국과 일본 사이의 정치적·경제적 爭點들은, 20세기 후반의 한일관계를 ‘불신과 긴장의 관계’로 만드는 요인이었다. 특히, 일본측에 의해 공식 혹은 비공식적으로 제기되어 온 한일합방의 정당화 주장이나 식민지 근대화론은 정치외교적인 측면의 갈등을 야기해온 대표적인 쟁점이었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심화되던 무역수지의 불균형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양국 사이에 첨예한 갈등을 불러온 대표적인 쟁점이었다.

이에 더해, 재일한국인의 법적 지위, 사할린동포의 귀환, 원폭피해자 보상, 종군위안부 보상, 그리고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 등은 정치적인 측면은 물론이고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양국의 정부와 양국민 사이에 불신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든 대표적인 쟁점들이었다.

이러한 쟁점들이 불거질 때마다 양국의 여론은 뜨겁게 달아올랐고, 양국의 지도자와 관계 기관의 실무자들은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분주하였다. 주지하다시피, 대응 방안의 모색에 있어 한일 양국은 접근방법이 달랐다. 일본의 접근방법이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초한 합리성의 추

- 1) 단행본 형태의 자료라 하더라도 번역서 혹은 편역서는 수집 및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러한 자료는 각국의 독창적인 연구성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 연구에서는 연구의 대상자료를 단행본에 국한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여러 제한이 따른다. 그러나, 인문사회과학분야에서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연구 성과는 단행본 형태로 집성됨을 고려하여, 또한, 인문사회과학분야의 연구에서 단행본 형태의 자료가 갖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더불어, 논문형태의 자료를 망라적으로 수집하는데 따르는 물리적 어려움과 시간적 제한을 감안하여, 이 연구에서는 우선 단행본을 중심으로 한일간의 지식정보의 생산 현황과 특성을 분석하였다. 논문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지식정보자원에 대한 연구는 이 연구의 후속 연구로 수행할 예정이다.
- 2)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다음 자료를 참조하기 바란다. 최정태·이제환·노지현, “20세기 한일간 지식정보의 생산과 흐름 분석 : 인문·사회과학분야 단행본을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 2002년도 춘계학술발표회의자료집』, 2002년 4월 21일, 연세대학교 인문대 회의실.

구였다면, 한국의 접근방법은 감성적이었고 차라리 즉흥적이었다. 이러한 차이는 근본적으로 양국의 정치문화와 정책수립행태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그에 못지 않게 영향을 미친 것은 양국이 관련 쟁점에 대해 소유하고 있던 지식정보의 규모와 품질이었다. 관련 쟁점에 대해 풍부한 지식정보를 보유하고 있던 일본은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으나, 그렇지 못했던 한국은 즉흥적이고 감성적인 대응 후에 울분을 삭이는 것이 고작이었다.<sup>3)</sup>

이렇듯 쟁점에 관련된 지식정보의 유무와 쟁점에 대한 대응방안의 수립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이러한 지식정보의 의미와 가치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관련 지식정보가 다루고 있는 주요 쟁점을 역사적 맥락에서 명확히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한일 양국간 서로에 대한 지식정보의 생산 현황과 특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20세기 100년 동안 한일관계의 진전에 영향을 미친 주요 사건과 쟁점들을 시기별로 나누어 조망해 보았다. 특히, 정치·경제적 쟁점을 중심으로 각 시기별 특성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먼저, 1901년부터 1910년까지의 구한말시대의 한일관계는 '일본의 일방적인 침략과 조선의 무기력한 저항'으로 특징지어 진다. 韓日關係史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공통적인 주장처럼, 明治維新에 성공한 일본은 近代國家를 성립해 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내외적 문제들을 조선을 이용하여 해결하고자 했으며, 그 과정에서 조선은 일본제국주의의 희생양이 되었다. 明治維新이후 시작된 일본의 조선침략은, 강화도조약(1876년)이후 20년 가까운 군사적 압박과 자원수탈 단계를 거쳐, 청일전쟁(1895년)이후에는 조선의 정치와 경제에 대한 실질적 지배권을 장악하는 단계로 이어졌다. 이후 러일전쟁(1905년)에서의 승리를 계기로 조선의 외교권마저 박탈한 일본은, 마침내 한일합방조약(1910년)을 강제로 체결하여 조선을 植民地化하였다. 이처럼, 근대 한일관계는 '협력과 공존'이 아닌 '침략과 수탈'의 관계로 시작되었다.

이어 1910년부터 시작된 36년간의 일제통치는 조선의 존재를 세계 지도에서 아예 지워버렸다. 따라서 이 시기의 한일관계는 엄밀히 말해 국가가 對 국가의 관계가 아닌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였다. 지배자 일본은 제국주의적 야망을 실현하고자 식민지 조선에 대한 탄압과 수탈을 자행하였는데, 1910년대에는 武斷統治에 의한 정치적 탄압을, 1920년대에는 文化統治를 표방한 경제적 수탈을, 그리고 1930년대 중반부터는 조선민족의 존재를 아예 말살하기 위한 문화·사상적 압제를 병행하였다.

이와 같은 식민지 조선에 대한 일본의 가혹한 지배와 통제는 양국민의 상호인식에 지울 수 없는 부정적 영향을 미쳤는데, 일본인에게는 한국에 대한 우월감과 멸시감을, 한국인에게

3) 뒤에 상세히 언급하겠지만, 정치와 경제분야에서 만큼은 사정이 달랐다. 특히, 경제분야에서의 사정은 달랐는데, 일본이 한국경제발전의 모델이었던 만큼 1970년대와 1980년대를 거치면서 한국의 일본경제연구는 규모나 품질 면에서 상당한 결과가 축적되어 있었다. 이에 비해, 일본의 한국경제연구는 상대적으로 빈약하였다. 그 결과는, 1990년대로 접어들면서, 양국간 무역수지의 불균형의 개선은 물론이고 비약적으로 발전한 한국경제가 여러 산업분야에서 일본을 추월하거나 치열한 선두다툼을 벌이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는 일본에 대한 적대감과 피해의식을 심어 놓았다.

1945년 해방이후부터 한일기본조약(1965년)이 체결되기 이전까지 약 20년 동안은 한일간 국교가 단절된 상태에서 쌍방간의 대립과 견제가 극심하던 時期였다. 식민지 경험에서 비롯된 부정적인 상호인식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의 이승만대통령은 강경한 對日 자세를 유지하면서 미국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한일교섭을 서두르지 않았고, 일본의 집권층 또한 식민지 지배에 대한 죄책감과 책임감을 결핍한 가운데 근본적인 韓國蔑視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호인식의 차이로 인해, 국교정상화를 위한 외교교섭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와중에 '식민지 시혜론'을 주장한 일본 외상 구보다의 발언과 재일한국인의 복송문제 등은 가뜰이나 냉랭한 한일관계를 완전한 반목과 대립 상태로 몰고 갔다.<sup>4)</sup> 이러한 정치적인 적대 분위기는 경제교류에도 영향을 미쳐 양국간 교역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sup>5)</sup>

1965년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는 한일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시기였다. 한일국교의 정상화를 계기로 한일간 정치·경제적 교류는 급속히 활발해졌다. 정치적으로는 '한일친선협회', '한일정기각료회의' 그리고 '한일의원연맹' 같은 제도적인 채널이 형성되어 한국과 일본의 정치지도층 사이의 교류가 긴밀해졌으며,<sup>6)</sup> 경제적으로는 일본을 경제발전의 모델로 삼았던

- 4) '일본의 식민지 경영을 통해 식민지 조선사회가 상당히 근대화되고 발전되었다'는 내용의 구보다 발언은 일본의 識者들 사이에 폭넓게 퍼져있던 '식민지 시혜론'을 대표하는 견해로서, 當時 진행 중이던 한일수교 교섭을 중단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이와 같은 일본의 주장에 대해 한국의 식자들은 '자본주의 맹아론', '원시적 수탈론', '민족정체성 훼손론' 등을 제기하며 강력히 반발하였다. 이러한 '식민지 역사'에 대한 상호인식의 차이는 이후 한일관계를 갈등과 반목으로 몰아가는 기본적인 걸림돌이 되었다. '식민지 시혜론'의 연장선에서 제기된 '한일합방조약 정당화론' 또한 한일 양국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한국의 학자들이 한일합방조약이 국제법상 불법이며 따라서 원칙적으로 무효임을 주장하는 반면, 일본의 학자들은 한일합방조약은 양국의 공식적인 대표에 의해 체결되었고 정치적으로도 국제적인 인준을 받았기 때문에 합법적이라 주장하였다. 한일합방조약의 합법성에 대한 양측의 견해 차이는 팽팽하여, 1965년의 한일기본조약문(제2조)에서조차 애매한 표현으로 남게 되었다. 즉, 한일기본조약문의 제2조는 '1910년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제국과의 사이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은 <이미> 무효임이 확인된다'는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이 문제를 일단 봉합하고 넘어갔다. 이러한 애매모호한 문구는, 이후 일본이 자국에 유리하게 문구를 해석하여 지난 날의 모든 조약과 식민지 지배에 대한 유효성을 주장하고 나서게 한 근거로 활용되었다.
- 5) 한국전쟁을 계기로 군수물자의 交易를 위해 양국 사이에 교류가 시작되기는 하였지만, 그 규모는 매우 작았다. 당시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아시아지역 통합전략의 핵심 연결고리로 인식하기 시작하였고, 이때부터 한국전쟁의 수행에 필요한 군수물자의 조달을 위해 한일간의 실질적인 경제통합을 가속화하였다. 그러나 한일 양국 사이에 경제교류의 규모가 확대되기 시작한 것은 1965년의 한일기본조약이 체결된 이후부터였다.
- 6) 이처럼, 지도층을 중심으로 한 양국의 협조가 긴밀하였던 원인은, 이 시기 양국의 정치와 경제 지도자들의 사상적, 의식적, 체질적 및 가치적 측면에서의 공통점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특히, 반공적인 이데올로기와 우익적인 성향은 양자가 공유하고 있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었다. 이에 더하여, 양국의 정치적 및 경제적 이해관계에 있어 일치성이 많았던 것도 원인으로 고려된다. 냉전체제하에서 일본과 한국은 자유우방국으로서 미국의 블록에 속해있었고, 경제발전의 당위성을 앞세워 국내 정치를 독재로 이끌던 박정희 정권과 그 후계자들은 일본으로부터의 경제협력이 절실했기 때문이었다. 일본의 지배층 또한 교육환경과 성장 배경이 유사한 한국의 정치지도자와 경제인들에 대해 친밀감을 느끼고 있었고, 이러한 공통분모는 양국의 협조를 긴밀하게 이끌어 내는 원동력이 되었다. 신희석, "현대일본의 정치와 한국 로비스트의 연구", 《외교》 제7·8호(1968), pp. 49-51.

한국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상품과 기술 그리고 자본 면에서 양국의 교역이 급속히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는 또한 양국 사이에 여러 가지 정치·경제적 쟁점들이 불거지면서 양국 관계가 '긴장과 갈등'을 경험하던 때이기도 하였다. 가령, 한국정부의 유일 합법성 문제, 재일 한국인의 법적 지위문제, 그리고 사할린 동포의 송환 문제 등으로 양국의 정치적 관계는 긴장 상태를 유지하였으며, 양국간의 무역규모가 확대될수록 한국의 對日 무역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적 문제로 인한 양국간 경제적 갈등이 첨예해지던 시기였다.<sup>7)</sup>

1980년대 중반부터 2000년까지의 15년 동안은, 한국과 일본 모두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급격한 정치적·경제적 변화를 경험하던 시기였다. 國內的 관점에서 볼 때, 韓國은 아시안 게임과 올림픽을 치르면서 국가적 자신감을 높였으며, 정치체제의 민주화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통하여 마침내 경제선진국의 대열(OECD)에 합류하였다. 특히, 對日 경제의존도는 1990년대 중반부터 급속도로 개선되고 여러 산업분야에서 일본과의 본격적인 무역경쟁에 돌입하던 시기였다. 日本 또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가파른 변화를 경험하였다. 終戰 이후 지속되어온 자민당 단독 정권이 붕괴되면서 정치적 안정에 변화를 겪었으며, 특히,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했던 1980년대의 경제력이 1990년대 들어서면서 와해되어 장기적인 경제불황으로 이어지던 시기였다.

이 時期에는 또한 국제정세도 급변하여 한일간 정치·경제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정치적으로는 脫冷戰으로 인해 이념보다는 민족의 이익을 중시하는 국제정치질서와 지역안보협력의 필요성이 강화되었으며, 경제적으로는 지역주의화와 글로벌리제이션의 확산으로 지역간 경제협력이 중요해졌다. 이로 인해, 기존의 한일관계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양자 경쟁체제에서 다자간 경쟁체제로의 변화를 경험하였으며, 이러한 다자간 경쟁체제하에서, 한일관계는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국제적 쟁점에서는 양국이 보다 긴밀히 협조하지만 각국의 이해가 대립되는 쟁점에서는 무한 경쟁을 벌이는 '선택적 협조와 무한 경쟁'이라는 특

7) 1965년 한국의 對日 수입은 1억 6,700만 달러였으나, 1985년에는 75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同 시기에 한국의 對日 수출은 4천5백만 달러에서 45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이처럼, 1985년 한국의 대일 무역역조는 30억 달러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였다. 대한무역진흥공사, 『한일 무역불균형의 근본요인과 시정방안』, 무공자료 88-27. 서울: 대한무역진흥공사, 1988. p. 17.

8) 1960년대 초 출범한 박정희 정권은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정책을 펼치면서, 일본으로부터의 자본과 기술 도입에 열중하였다. 특히, 1973년부터 시작된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이 일본의 자본과 기술에 보다 직접적으로 의존하게 되고, 일본 기업의 對韓 직접 투자가 증가하면서, 한국경제의 일본경제 의존도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후 한국경제의 발전과 수출증대에는 반드시 대일 수입증가 수반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최상룡 외, 『脫冷戰期 韓日關係의 爭點』, 서울: 집문당, 1998. pp. 134-135. 이러한 대일 무역역조 구조는 1980년대 중반까지 이어져, 한국경제의 자립적인 발전에 부담이자 약점으로 남아 있었다. 그러다가 일본에 대한 경제적 의존이 만성화되는 현상을 우려한 한국의 경제학자들과 경제관료들 그리고 기업들의 대응과 노력에 힘입어, 특히, 1985년을 기점으로 한일간의 무역구조가 종래의 산업간 분업 형태에서 산업內 분업의 비중을 높이는 형태로 변화하면서, 1980년대 후반부터 대일 무역역조 현상은 다소 완화되기 시작하였다.

수한 관계에 돌입한 시기였다.<sup>9)</sup>

### 3. 정치분야 지식정보의 현황과 특성

그렇다면 이렇듯 급변하던 20세기의 한일관계, 특히 정치관계에 있어, 한국과 일본은 상대국의 정치에 관해 어느 정도 지식정보를 생산해 왔으며, 그러한 지식정보는 어떠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가? 특히, 한일 양국은 상대국의 정치에 관해 어떠한 목적에서 어떠한 영역을 중심으로 얼마나 체계적으로 연구해 왔을까? 이 장에서는 이러한 의문에 대해 개괄적으로나마 알아보기 위해, 한일 양국이 지난 100년 동안 서로에 대해 생산해낸 정치관련 단행본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연구팀이 수집한 정치관련 단행본은 모두 1,001종이었으며, 이들 단행본의 생산시기와 연구내용 그리고 생산주체를 중심으로 한국에 의한 일본정치연구와 일본에 의한 한국정치연구를 비교 분석하였다.

#### 3.1 시기별 현황과 특성

계량적인 측면에서 볼 때, 20세기에 이루어진 일본에 의한 한국정치연구는 한국에 의한 일본정치연구를 크게 앞서 있다. 연구팀이 수집한 단행본은 한국에서의 일본정치연구가 374종인데 비해 일본에서의 한국정치연구는 627종이었다. 그러나 20세기 전반부의 한일관계를 고려하여 1945년 이후에 생산된 단행본만을 비교해 보면, 일본의 생산량(469종)과 한국의 생산량(374종)의 차이는 현저히 줄어든다. 특히, 1990년대로 접어들면서부터는 상황이 역전되어, 한국의 생산량(221종)이 일본의 생산량(121종)을 크게 앞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의 <표 1>은 1901년부터 2000년까지 한일 양국이 서로에 대해 생산한 정치관련 단행본을 생산시기별로 정리해 놓은 것이다.

9) 이러한 선택적 협력과 무한 경쟁의 관계는 양국민 사이의 민간교류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이 시기에는 兩國 모두에서 전후세대의 사회적 역할이 증대하면서 여행이나 학술교류 혹은 대중문화의 교류 등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려는 다양한 노력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한일 양국에서 민족주의 경향이 짙어지면서 '정신대 문제'나 '역사교과서 문제'와 같은 일제통치시대의 경험에서 비롯된 갈등과 '독도 문제'나 '어업협정문제'와 같은 정치경제적 이해득실과 관련된 반목이 더욱 노골화되기도 하였다. 특히, 일본 지도층에 의한 過去事 관련 妄言과 對韓 謝罪가 반복되면서, 兩國 國民 사이에 쌍방에 대한 불신이 더욱 깊어지던 시기이기도 하였다.



<표 1> 정치분야 단행본의 시기별 통계 (1901-2000)

생산시기		생산종수		출판시기		생산종수	
		한국	일본			한국	일본
I	1901-1905	0	6		1956-1960	6	5
	1906-1910	0	9*		1961-1965	9	12
II	1911-1915	0	10	IV	1966-1970	6	21
	1916-1920	0	12		1971-1975	16	25
	1921-1925	0	24		1976-1980	30	82
	1926-1930	0	24		1981-1985	37	55
	1931-1935	0	43	V	1986-1990	42	141
	1936-1940	0	19		1991-1995	110	68
	1941-1945	0	3		1996-2000	111	53
III	1946-1950	1	1	연도미상		1	8**
	1951-1955	5	6	합계		374	627

\* 1910년 한일합방이후 생산된 단행본 5종이 포함된 수치

\*\* 1945년 이전에 생산되었으나 정확한 출판연도를 알 수 없는 단행본

표에 나타나듯이, 일본은 구한말시대인 1900년대 초부터 이미 한국의 정치분야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여, 1901년부터 한일합방 직전까지 모두 10종의 단행본을 생산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 한국이 생산한 단행본이 전무하였음을 고려할 때, 일본의 한국정치분야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컸음이 드러난다. 특히, 이 시기에 생산된 단행본은 대부분 한국의 정세를 분석하거나 군사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담고있어, 일본이 한국의 식민지화를 위한 준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하였음을 느끼게 한다.

한국의 정치·외교·군사 현황을 조사하여 지배와 통치를 위한 자료로서 활용하고자 했던 일본의 의도는 한일합방이후에는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의 식민지 통치기간 동안 148종에 이르는 정치관련 단행본이 생산되었는데, 이 자료의 대부분은 조선총독부가 중심이 되어 식민지 조선의 민정과 정세 그리고 군사현황 등을 조사한 것이었다. 이 시기에 생산된 단행본을 일본의 식민지 통치전략과 연관시켜 계량적으로 분석해 보면, 일본의 의도가 보다 분명해 진다.

가령, '무단통치시기'로 통칭되는 1910년부터 1920년까지 생산된 정치관련 단행본이 모두 22종이었으나, '문화통치'를 표방하던 1920년대와 1930년대 전반까지는 모두 90종이 넘는 정치관련 단행본이 생산되었다. 이 수치는 조선인에 대한 '말살정책'이 시작되던 1930년대 후반부터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하여(19종) 1940년대에 접어들면 겨우 명맥만 유지할 정도로 미미해진다(3종). 이처럼, 식민지시대의 정치관련 단행본의 생산은 일본의 식민지정책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1930년대 전반까지는 식민지 조선의 통치를 위한 기초자료로

서 현황보고서나 정세분석자료가 지속적으로 필요했지만, 1930년대 후반부터는 이러한 기초자료의 필요성이 줄어들면서 정치관련 단행본의 전체적인 생산량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태평양전쟁이 끝나고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에서 해방된 이후부터 박정희 정권에 의해 한일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의 국교단절기에는 '休閑期'라 할 정도로 한일 양국은 서로에 대한 정치연구에 있어 기나긴 동면상태에 빠져들었다. 이 시기에 생산된 정치관련 단행본은 한일 양국을 합쳐 모두 45종이었는데, 한국과 일본의 생산량이 각각 21종과 24종으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단행본의 대부분은 한일협정의 준비과정에서 생산된 것으로, 식민지시대에 잉태된 상호불신감이 짙게 남아있던 한일 양국이 상대국의 국내정치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가질 수 없었던 시대적 특성을 그대로 반영한다.

한일협정이 체결된 다음 해인 1966년부터 1975년까지 10년 동안, 일본에 의해 생산된 단행본은 46종이었으나 한국에 의해 생산된 단행본은 절반 정도에 불과한 22종에 그쳤다. 이러한 통계는 한국정치에 대한 일본의 관심이 서서히 깊어지고 있는 반면, 일본정치에 대한 한국의 관심은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서 한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이 시기에 일본에 의해 출판된 단행본의 대부분이 한국정치에 대한 독립적인 연구의 결과라기보다는 한일관계 특히 한일간 정치·외교·군사 관계를 역사적 혹은 안보적 차원에서 다룬 연구물이라는 점이다. 이처럼, 한국정치를 독립적인 관점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분위기는 일본에서도 아직 성숙되지 못하고 있었다.

한국정치에 대한 일본의 관심이 급속히 확대된 것은 1970년대 후반부터였다. 1976년부터 1980년까지 5년 동안 무려 80종이 넘는 단행본이 생산되었는데, 이는 終戰 이후 1975년까지 30년 동안 생산된 단행본의 총수를 훨씬 능가하는 수치였다. 같은 시기에 한국은 30종의 단행본을 생산하여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한국정치에 관한 일본의 관심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던 1980년대 후반에 이르면 대폭 증가하여, 이 시기의 5년 동안 무려 141종에 이르는 단행본을 생산하였다. 같은 시기에, 일본의 생산량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일본정치에 대한 한국의 관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79종의 일본정치 관련 단행본을 생산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로 접어들면서부터 한국과 일본의 연구 생산량은 역전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의 10년 동안 한국은 무려 221종에 이르는 단행본을 생산하였는데, 이는 以前까지 한국이 생산해낸 일본정치 관련 단행본의 총수를 능가하는 수치이다. 이에 비해, 同 시기에 일본은 121종의 단행본을 생산하여 1980년대에 비해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이러한 통계는 일본에 의한 한국정치연구는 1970년대와 1980년대에 활성화되다가 1990년대에는 다소 주춤한 상태에 머물러 있으나, 한국에 의한 일본정치연구는 1980년대에 시작되어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더욱 본격화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구팀의 짐작은 어디까지나 단행본의 시기별 생산량에 따른 계량적인 분석에 불과하며, 한일 양

국이 상대국의 정치에 대해 얼마나 체계적으로 연구하였는지는 생산된 단행본의 내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비로소 가능하다. 이에 연구팀은 한일 양국이 생산한 단행본의 주제별 현황과 특성을 분석하였다.

### 3.2 주제별 현황과 특성

<표 2>는 1945년 이후 정치분야에서 한일 양국이 서로에 대해 생산한 단행본을 주제별로 정리해 놓은 것이다.<sup>10)</sup> 표의 통계에서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한일 양국 모두 상대국의 국내정치보다는 대외정치에 보다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한일관계를 비롯한 상대국의 국제관계, 특히 외교·군사·안보관계에 대한 관심이 상대국의 정치제도나 정치과정 그리고 정치사상 등에 대한 관심보다 훨씬 크게 나타났다.

표의 통계는 또한 한일 양국이 관심을 두고있는 주제영역의 차이를 확연히 보여준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한국이 일본의 정치제도에 관해 커다란 관심을 보인 반면 일본은 한국의 정치과정에 대해 보다 큰 관심을 보였다라는 점이다. 이에 더해, 한국이 일본의 외교정책에 커다란 관심을 나타낸 반면, 일본은 한국의 군사안보정책에 보다 큰 관심을 보여온 것으로 나타난다. 일본은 특히, 한일관계는 물론이고 한반도의 통일을 둘러싼 남북문제에도 지대한 관심을 보여왔다.

이렇듯, 한국과 일본은 정치적 관심과 한일관계의 변화에 따라 생산해낸 단행본의 내용에서 큰 차이를 보였는데, 양국이 생산해낸 단행본의 내용에는 어떠한 특징이 나타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10) 한국에 의한 일본정치연구가 전무하였던 1945년 이전에 일본에 의해 생산된 단행본 158종은 비교분석에서 제외하였다. 1945년 이전에 생산된 단행본의 주제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구한말시대(1901년-1910년)에 생산된 단행본의 주제는, 정세분석(3종), 외교정책(3종), 군사현황(3종), 일본인조선이주정책(1종)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식민지시대에 생산된 148종의 정치관련 단행본의 주제는, 식민지 통치정책(내정, 치안, 황민화 정책 등이 88종), 군사정책 및 현황(30종), 내정 관련 현황조사(21종), 항일운동(8종), 기타(1종)으로 파악되었다.

<표 2> 정치분야 단행본의 주제별 통계 (1945년 이후)

연구주제	생산종수		연구주제	생산종수	
	한국	일본		한국	일본
정치제도	57(15%)	2(0.4%)	외교정책 (한일관계제외)	73(20%)	37(8%)
정치과정	42(11%)	92(20%)	군사·안보정책 (한일관계제외)	36(10%)	77(16%)
정치사상	16(4%)	7(1.5%)	한일관계 (통일·남북관계제외)	120(32%)	172(37%)
정치경제	7(2%)	1(0.2%)	통일·남북관계	20(5%)	62(13%)
정치문화	3(1%)	5(1.1%)	합계	374(100%)	469(100%)*

\* 연구팀이 분류한 소주제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가령, 일본인처의 복송문제를 다룬 단행본) 14종을 포함한 수치이다.

① 한국이 생산한 단행본의 주제별 분석

한국에 의해 생산된 단행본을 주제별로 살펴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경향이 ‘일본의 대외정치’를 다룬 단행본이 ‘일본의 국내정치’를 다룬 단행본보다 훨씬 비중이 크다는 사실이다. 수집한 단행본 374종 가운데 대외정치를 다룬 단행본은 250종으로 국내정치를 다룬 단행본(122종)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sup>11)</sup> 이러한 수치는 일본정치를 독립적으로 이해하려는 경향보다 국제정치적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경향이 한국의 일본연구자들 사이에 보다 보편적이었음을 보여준다.

‘일본의 대외정치’를 연구한 단행본은 국제정치적 관점에서 일본의 외교·안보정책을 분석한 연구와 한일관계를 중심으로 일본의 외교·안보정책을 분석한 연구로 구분되었는데, 전자보다는 후자의 비중이 크게 나타났다. 한일간 정치관계를 다룬 단행본 중에는 일본의 외교·안보정책이 한반도의 정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내용이 가장 많았고, 그밖에, 한일협정을 전후한 양국의 정치관계를 역사적 관점에서 다룬 연구, 남북문제(통일문제)에 대한 일본의 외교정책을 분석한 연구, 재일한국인의 법적 지위나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과 같은 시의적인 현안을 다룬 연구 등이 있었다.

이처럼, ‘일본의 대외정치’에 관한 연구는 한일관계를 중심으로 일본의 정치·외교·안보·군사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주종을 이루고 있었다.<sup>12)</sup> 그러나 이러한 韓日‘關係’ 중심의 연구경향은 1990년대 들어서면서부터는 조금씩 변모

11) 대외정치와 국내정치를 함께 다룬 단행본은 46종이었다.

12) 대표적인 연구로는 김상준의 『일본국내정세의 변동과 한·일협력체제 강화방안』(1978), 윤정식의 『일본대외정책과 한국』(1988), 안병만의 『미일안보협력관계의 발전과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1998), 민족통일연구원의 『중국과 일본의 군사력 증강이 한반도 안보에 미칠 영향』(1994) 등이 있다.

하여, 1990년대 중반부터는 ‘일본의 대외정치’를 한일관계라는 제한된 틀에서 보기보다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연구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sup>13)</sup> 이러한 연구는 특히 한일관계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을 국제정치적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향후 한일관계의 바람직한 진전을 위한 정책결정에 요긴한 자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일본의 국내정치’에 관한 단행본은 양적으로는 적었지만 주제의 다양성은 돋보였다. 이들 단행본은 의회제도나 선거제도와 같은 정치제도에 대한 연구를 비롯하여, 정권교체나 정치적 리더십과 같은 정치과정에 대한 연구, 그리고 정치사상이나 정치경제 혹은 정치문화 등에 대해서 폭넓게 다루고 있었다. 이렇듯 다양한 국내정치관련 주제 중에서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주제영역은 정치제도이었다(57종).

일본의 정당구도, 정부조직, 정치자금제도, 선거제도, 지방자치제도 등에 대해 폭넓게 다루고 있었다. 특히, 이러한 단행본의 생산시기는 대부분 한국에서 관련 분야의 정치개혁이 활발히 진행되던 시점과 일치하여 일본이 한국정치개혁의 모델이 되었음을 짐작하게 하였다.<sup>14)</sup>

정치제도 다음으로 많은 단행본이 생산된 주제영역은 정치과정이었다(42종). 이들 중에는 戰後 일본의 정권교체와 정책변화에 관한 연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대부분이 1955년 체제와 자민당의 장기집권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었다.

또한 戰後 일본정치사와 특정 정치가를 주제로 한 단행본도 간간히 발견되었으나, 그 내용이 지나치게 자민당에 편중되어 있어 일본정치체제의 전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었다.<sup>15)</sup>

이에 더해, 일본의 정치사상을 집중적으로 다룬 단행본도 적지 않은 종이 출판되었는데(16종), 일본의 보수우익주의와 천황제 파시즘을 다룬 연구가 두드러졌다.<sup>16)</sup> 또한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일본의 정치와 경제의 상호관계를 분석한 단행본도 꾸준히 출판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7종), 각종 산업정책의 형성과정에 대한 정치적 영향을 분석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sup>17)</sup>

13) 가령, 신희석의 『일본의 외교정책』(1991)과 『현대 일본의 외교정책 결정과정 연구: 정책결정 요목과 단위 중심으로』(1992), 외교안보연구원의 『최근 일본의 정치변동과 대외정책 전망』(1994), 일본연구센터의 『일본의 정책변화와 장래』(1996), 양기웅의 『일본의 외교협상』(1998), 서동만의 『일본의 유라시아 외교』(1999), 이승원의 『일본의 전후 외교체제』(2000), 김성철의 『일본의 외교정책』(2000) 등은 이러한 연구경향을 보여주는 대표적 단행본이다.

14) 정치제도를 연구한 대표적인 단행본으로는 박찬표의 『일본의 정치자금 제도』(1991), 한국노동연구원의 『일본의 지방자치와 노동행정』(1993), 최종만의 『일본의 자치제 개혁』(1998) 등이 있다.

15) 정치과정에 관한 대표적인 단행본으로는 현대일본연구회의 『자민당의 장기집권 연구』(1982), 박경석의 『일본자민당: 결과와 지도자들』(1990), 배한동의 『일본 공화당의 위기구조』(1995), 한상일의 『일본 전후 정치의 변동: 점령통치에서 새 체제의 모색까지』(1997) 등이 있다.

16) 박용진의 『점령관리와 천황제파시즘』(1986), 김동철의 『천황제 민주주의』(1992), 김호섭의 『일본우익연구』(2000) 등은 정치사상을 다룬 대표적인 단행본이다.

17) 대표적인 단행본으로는 정재영의 『일본의 보수연합과 경제정책』(1990), 송주명의 『일본의 경제위기와 ‘통합’의 정치적 대응: 정치경제체제의 변화』(1999) 등이 있다.

그러나 일본의 정치문화를 다룬 단행본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으며(3종), 생산된 단행본의 내용도 일본 정치문화의 특수성을 논하기보다는 근대화 과정에서 형성된 일본문화의 특수성을 소개하는데 그치고 있었다.<sup>18)</sup>

## ② 일본이 생산한 단행본의 주제별 분석

일본에 의한 한국정치연구는 상대적으로 긴 역사만큼이나 연구내용에 있어 특징이 두드러졌다. 무엇보다도 흥미로운 특징은 한일간 정치관계의 변화에 따라 생산되는 단행본의 내용이 밀접한 관련을 맺고있다는 사실이었다.<sup>19)</sup> 이러한 연구경향은 終戰 이후 일본이 생산해온 한국정치 관련 단행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보다 명확해 진다. 먼저 눈에 띄는 현상은, 일본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대외정치’를 다룬 단행본이 ‘한국의 국내정치’를 다룬 단행본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사실이다. 1945년 이후에 생산된 469종의 단행본 가운데, 한국의 대외정치에 관한 단행본이 362종으로 한국의 국내정치에 관한 단행본(107종)에 비해 약 3.5배에 이르렀다.

이러한 대외정치에 관한 단행본들은 주로 한일관계를 비롯한 남북관계나 북한문제를 다루고 있는데(247종),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관계와 ‘한일간 과거사’를 둘러싼 정치적 현안에 집중되어 있었다.

특히, 한일관계를 다룬 단행본에는 재일한국인문제를 비롯하여(56종) 독도문제 등 정치적 현안을 다룬 연구가 많았으며, 이외에 식민지시대와 戰後 배상문제를 정치적 관점에서 재조명한 연구들도 적지 않은 種이 발견되었다.<sup>20)</sup> 또 하나의 특징은 ‘한국전쟁’에 관한 단행본이 59종이나 생산되었다는 사실인데, 이들 단행본의 생산시기가 한국전쟁 와중인 1951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한국전쟁에 관한 일본의 관심이 각별함을 느끼게 하

18) 대표적인 연구로는 한태호의 『현대일본정치문화사』(1990)를 들 수 있다.

19) 가령, 구한말시대에는 주로 한국에 대한 침략과 지배를 목적으로 한국의 내정과 대외관계 그리고 군사현황을 조사하는 단행본이 생산되었고, 식민지시대에는 주로 식민지 통치를 위한 민정과 치안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는 단행본이 생산되었다. 국교단절시기에는 한일간의 국교정상화문제를 거론한 단행본이, 국교정상화이후 한국의 민주화투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던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전반까지는 한일간의 외교와 안보문제 그리고 한국의 민주화과정을 소개하는 단행본이 주로 생산되었다. 다음, 1980년대 후반, 즉, 한국이 정치민주화와 경제선진화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내던 시기부터 한국정치 전반에 대한 일본의 관심은 부쩍 커지는데, 이 무렵에는 한국의 정치과정에 더해 정치제도와 정치사상 그리고 정치문화를 본격적으로 연구한 단행본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어, 냉전의 종식과 함께 새로운 국제정치질서가 태동하던 1990년대로 접어들면, 한국과 북한 그리고 일본의 삼각 관계를 정치·외교·안보적인 관점에서 다룬 단행본이 집중적으로 생산되었다.

20) 田村清三郎의 『島根縣竹島の新研究』(1965), 田中 宏 등의 『現在の在日朝鮮人問題』(1984), 「アジア 太平洋地域の戦争犠牲者に思いを馳せ, 心に刻む集會」 實行委員會의 『證言 清算されていない朝鮮支配』(1991), 戰後補償問題連絡委員會의 『朝鮮植民地支配と戰後補償』(1992) 등이 이러한 연구경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단행본이다.

였다.<sup>21)</sup>

그러나 한국의 국내정치를 다루고있는 단행본은 상대적으로 빈약하여 모두 107종에 불과하였는데, 이들의 대부분이 1970년대 중반이후에 생산된 것이었다. 이들 단행본의 내용은 대부분 한국의 정치동향을 분석한 것이었으며, 특히, 정치과정에 관한 분석과 소개가 압도적으로 많았다(92종). 정치과정에 관한 단행본은 한국의 정권변화과정과 민주화과정을 다룬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 개별 정치인에 관한 단행본이나 정치과정을 역사적 관점에서 서술한 단행본도 심심치 않게 발견되었다.<sup>22)</sup>

특이하게도 정치과정에 대한 높은 관심과는 달리, 한국의 정치제도나 정치사상 그리고 정치문화 등에 대한 관심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세부 주제를 독립적으로 연구한 단행본은 수적으로 미미하였으며(15종), 이들의 생산시기도 1970년대 후반부터 2000년까지 산만하게 분포되어 있었다.<sup>23)</sup>

이처럼, 한국의 국내정치에 대한 일본의 관심은 정치현황이나 동향을 소개하는데 집중되어 있었고, 한국의 국내정치를 독립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빈약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 3.3 생산주체별 현황과 특성

단행본의 생산주체를 분석해 보면, 한일 양국에서 상대국의 정치에 대한 연구가 어떠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표 3>은 1945년 이후 정치분야에서 한일 양국이 서로에 대해 생산한 단행본을 생산주체별로 정리해 놓은 것이다.<sup>24)</sup> 표에서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한국과 일본이 생산주체의 성격에 있어서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경우는 정부기관과 국책연구기관 등에 의해 생산된 단행본이 전체 생산량의 절반에 이를 정도로 국가의 역할이 컸으나, 일본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단행본(96%)이 개인

21) 한국전쟁에 관한 일본의 대표적인 연구로는 外務省調査局의 『朝鮮事變の経緯』(1951), 直井武夫의 『朝鮮戰亂の眞實』(1953), 神谷不二의 『朝鮮戰爭 米中對決の原形』(1966), 兒島襄의 『朝鮮戰爭 第1-3卷』(1977) 등이 있다.

22) 한국의 정권변화와 민주화과정을 소개·분석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猪狩章의 『光州80年5月つかの間の春の虐殺』(1980), 田村哲夫의 『激動ソウル1500日 全斗煥政權への道』(1984), 日韓政治文化協議會의 『わか祖國韓國 金泳三大統領の歩み 韓國民主化への道』(1996) 등이, 한국 정치인에 관한 연구로는 吉留路樹의 『朴政權の素顔 その恐怖政治・腐敗政治の實態』(1974), 中川信夫의 『日韓關係と全斗煥體制』(1981) 등이 있다.

23) 한국의 정치제도, 정치사상, 정치문화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石井清司의 『韓國反體制の水脈』(1981), 瀧澤秀樹의 『韓國民族主義論序説』(1984), 自治體國際化協會의 『大韓民國の地方選舉について』(1995) 등이 있다.

24) 한국에 의한 일본정치연구가 전무하였던 1945년 이전에 일본에 의해 생산된 단행본 158종은 비교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 시기에 생산된 단행본의 생산주체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 중앙행정기관(46종-조선총독부가 생산한 35종 포함), 지방행정기관(1종), 민간연구기관(19종), 개인 연구자(87종), 기타(5종).

연구자와 민간연구기관에 의해 생산되었을 정도로 민간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 한일 양국의 생산주체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이러한 경향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표 3> 정치분야 단행본의 생산주체별 통계 (1945년 이후)

생산주체	생산종수		생산주체	생산종수	
	한국	일본		한국	일본
중앙행정기관	54(14.5%)	11(2%)	민간연구기관	69(18.5%)	112(24%)
지방행정기관	5(1%)	1(0.2%)	개인 연구자	112(30%)	322(69%)
입법관련기관	41(11%)	0(0%)	기타	12(3%)*	19(4%)**
국책연구기관	81(22%)	4(0.8%)	합계	374(100%)	469(100%)

\* 저자 미상 혹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이나 한일문화교류기금 등이 생산주체로 되어있는 단행본

\*\* 조선총독부 발행 단행본 4종과 생산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단행본

먼저, 한국에서의 생산주체별 단행본의 규모는 행정기관과 입법관련기관 그리고 국책연구기관과 같은 국가기관이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개인 연구자 그룹과 민간연구기관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들 생산주체의 성격에 따라 단행본의 성격에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 가령, 외무부나 통일원 같은 중앙행정기관, 국회사무처와 같은 입법관련기관, 그리고 외교안보연구원이나 한국국방연구원과 같은 국책연구기관이 중심이 되어 생산한 단행본은 한일간 정치·외교·군사 관련懸案에 대한 대응방안이나 관련 법규의 제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시의성’ 있는 연구가 많았다.<sup>25)</sup> 반면, 현대일본연구회와 같은 관련 학회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와 같은 대학부설연구소 그리고 세종연구소와 같은 민간연구소가 주관하여 생산한 단행본은 보다 체계적이며 학술적인 연구가 많았다.<sup>26)</sup> 단행본을 출판한 개인 연구자들은 대부분 대학이나 관련 연구소에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개인 연구자들에 의한 단행본의 출판은 1980년대 후반부터 서서히 늘어나기 시작하여(19종) 1990년대에만 약 60종이 생산될 정

25) 이러한 자료는 국가의 정책결정이나 이익추구와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단행본 중에 행정 혹은 입법기관이 생산한 자료로는 외무부의 『전후 일본의 대미 대중외교의 전략적 특징』(1979), 국토통일원의 『미일 신정권 출발후의 대한반도정책 전망』(1980), 서울특별시의 『동경도정연구』(1990), 전라북도의 『일본지방자치체의 CI전략연구』(1992), 국회도서관 입법조사국의 『최근 한일 어업분쟁과 대책』(1997) 등이 있으며, 국책연구기관이 생산한 자료로는 국방연구원의 『일본의 대동남아 대양해군 전략의 가능성과 한계』(1997), 통일연구원의 『탈냉전기 일본의 국내 정치변동과 대외정책』(1999) 등이 있다.

26) 이들 단행본은 대부분 1980년대를 거쳐 1990년대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생산되는데, 전문 연구자들에 의한 체계적인 연구결과를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단행본 중에, 관련 학회에서 생산한 단행본으로는 현대일본연구회의 『일본정치론』(1981)과 『일본정책연구의 해부』(1984), 한국일본학회의 『일본정치의 이해』 등이 있으며, 대학부설연구소에서 생산한 단행본으로는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의 『현대 일본의 정치』(1986), 명지대학교 일본문제연구소의 『일본형 보신화 사회와 자민당의 대응』(1992),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의 『일본 해상방위론』(1995) 등이 있다. 한편, 민간연구소에서 생산한 단행본으로는 세종연구소의 『대소지원문제와 일본』(1991), 삼성경제연구소의 『일본의 지방자치: 어제와 오늘』(1996) 등이 있다.



도로 급속한 증가를 보였다. 이들에 의해 생산된 단행본은 거의 대부분이 전문적인 학술저서로서 장기간에 걸친 체계적인 연구성과를 반영하고 있다.<sup>27)</sup>

이들 단행본은 연구의 주제도 다양하고, 무엇보다도, 연구의 객관성 확보가 중시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이처럼, 단행본의 생산주체별 현황을 분석해 보면, 한국에서의 일본정치연구는 1980년대 후반부터 전문 연구자들이 늘어나면서 양적인 성장과 병행하여 질적인 성숙을 이루어지고 있음을 실감하게 된다.<sup>28)</sup> 한편, 일본의 경우에는 국가기관이나 국책연구기관에 의해 생산된 단행본은 16종에 불과하고, 개인 저자에 의한 단행본이 전체의 ⅔에 이를 정도로 개인 저자들이 한국정치연구를 주도해 오고 있었다. 이들 개인 저자들의 배경을 분석해 보면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나는데, 무엇보다도 눈에 띄는 것은 개인 저자의 다수가 한국정치를 전공한 학자라기보다 국제정치를 전공하면서 한국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학자들이라는 점이다. 그러다 보니, 이들의 저서에는 한국정치를 독립적 시각에서 논의하기보다는 국제관계의 테두리 안에서 논의하거나,<sup>29)</sup> 한국의 시기별 정치현황과 동향을 분석하여 소개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sup>30)</sup>

일본 단행본의 생산주체에서 나타나는 이와 같은 특징은, 앞서 주제별 분석에서 나타났던 특징, 즉, 한국의 정치제도나 정치사상 혹은 정치문화 등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한 단행본은 드문 반면 국제관계 특히 동아시아관계 속에서 한국의 정치와 외교 그리고 군사 문제를 논의한 단행본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理由를 설명해 주며, 특히, 한국의 정권변화와 민주화과정과 같은 시사적인 문제를 다룬 단행본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理由를 짐작하게 한다. 이처럼, 일본의 한국정치연구는 대단히 '현상 중심적'이며 '관계 중심적'인 특징을 지녔으며, 아직까지 정치학의 독립적인 영역이라기보다는 국제정치학 특히 동아시아정치학의 부속 영역으로 연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 27) 일본정치·외교·군사 관련 단행본을 활발하게 생산한 대표적인 학자로는, 김승홍, 김영명, 김순현, 김용서, 김장권, 성황용, 손승철, 신용하, 신희석, 윤정석, 이숙중, 이호철, 정용석, 정재길, 한상일, 한태호 등이 있다.
- 28) 이러한 現狀은, 이 연구에서는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1990년대 말부터 집중적으로 생산되기 시작한 국내 학위논문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가령, 『일본 보수정권의 붕괴과정에 대한 연구』(1999), 『일본의 정치개혁에 관한 연구』(1999), 『일본의 외교·안보정책의 변화에 관한 연구』(1999), 『일본의 선거제도 개정과 정치개혁』(1999), 『일본주의연구』(2000) 등 다수의 학위논문이 생산되었다.
- 29) 이러한 유형의 대표적인 학자로는, 岡井輝雄, 岡興一, 關寛治, 神谷不二, 前田康博, 和田春樹, 黒田勝弘, 土山實男, 伊豆見三, 堀眞清, 伊藤一彦, 山本剛土, 三谷博 등이 있다. 또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關寛治, 高瀬淨의 『朝鮮半島と國際關係』(1982), 渡邊修二郎의 『東邦關係』(1984), 日本國際政治學會의 『朝鮮半島の國際政治』(1989), 山極晃의 『東アジアと冷戦』(1994) 등을 들 수 있다.
- 30) 한국의 정치과정에 관한 단행본을 중점적으로 저술한 개인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다: 高權二, 高峻石, 石井清司, 細井肇, 小谷豪治郎, 小田實, 柴田穂, 阿部薫, 五島隆夫, 伊藤成彦, 猪狩亨, 鳥羽欽一郎, 中川信夫 등. 대표적인 연구로는 新谷秀春의 『ひき裂かれた朝鮮 70年代のアジアの日』(1970), 高峻石의 『南朝鮮學生闘争史』(1976), 小谷豪治郎의 『韓國の危機』(1987), 伊藤成彦의 『韓國大統領選舉と南北統一』(1992) 등이 있다.

## 4. 경제분야 지식정보의 현황과 특성

연구팀이 수집한 한일 양국이 상대국의 경제에 관해 생산해낸 단행본은 모두 2,202종이었다. 한국이 일본경제를 연구하여 생산해낸 단행본이 1,137종이었고, 일본이 한국경제를 연구하여 생산해낸 단행본이 1,065종이었다. 이와 같은 단행본의 생산 규모에서 알 수 있듯이, 경제분야는 한일 양국이 모두 지대한 관심을 보여온 분야였다. 시대적 상황에 따라 관심의 정도와 영역이 변화하기는 하였지만, 한일 양국은 때로는 협력자로서 때로는 경쟁자로서 상대국의 경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왔다. 그렇다면, 한일 양국은 상대국의 경제에 대해 어떠한 목적에서 어떠한 영역을 중심으로 얼마나 체계적으로 연구해 왔을까? 이 장에서는 이러한 의문에 대해 개괄적이거나 알아보기 위해, 한일 양국이 생산해낸 단행본을 생산시기와 연구내용 그리고 생산주체를 중심으로 비교 분석해 보았다.

### 4.1 시기별 현황과 특성

한일 양국이 경제분야에서 생산해낸 단행본의 시기별 현황에서 나타나는 가장 뚜렷한 특징은, 한국과 일본이 생산해낸 단행본의 규모가 1945년 解放(일본의 입장에선 終戰)을 기점으로 以前과 以後가 확연히 구분된다는 점이다. 즉, 1945년 이전에는 일본에 의한 한국경제 연구가 일방적으로 수행되었으나, 1945년 이후에는 한국에 의한 일본경제연구가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연구팀이 수집한 한국의 단행본 1,137종은 모두 1945년 이후에 생산된 것이었으나, 일본이 생산한 단행본 1,065종의 약 ⅔는 1945년 이전에 생산된 것이었다.

이렇듯, 1945년 이후만을 대상으로 할 때, 한국은 일본에 비해 3배에 이르는 단행본을 생산해낼 정도로 일본경제에 대한 연구가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1945년 이전에는 조선에 대한 경제침탈을 목적으로 일본이 조선경제 전반에 걸쳐 폭넓은 연구를 진행하였던 반면, 1945년 이후 특히 1965년 국교재개이후부터는 경제발전의 모델이었던 일본경제에 대한 한국의 연구가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되었음을 반영한다.

주요 시기별로 한일 양국이 생산한 단행본의 현황과 특성을 분석해 보면 이러한 현상은 보다 뚜렷하게 나타난다.

<표 4> 경제분야 단행본의 시기별 현황

생산시기	생산종수		생산시기	생산종수			
	한국	일본		한국	일본		
I	1901-1905	0	35	1956-1960	0	0	
	1906-1910	0	49		1961-1965	9	2
II	1911-1915	0	61	IV	1966-1970	20	14
	1916-1920	0	29		1971-1975	33	16
	1921-1925	0	84		1976-1980	48	29
	1926-1930	0	124		1981-1985	139	44
	1931-1935	0	158	V	1986-1990	239	126
	1936-1940	0	111		1991-1995	420	56
	1941-1945	0	38		1996-2000	223	61
	1946-1950	0	0		연도미상	4	27
III	1951-1955	2	1	합계	1,137	1,065	

먼저, 구한말시대인 1901년부터 1910년까지 한국이 일본경제에 관해 생산해낸 단행본은 전무하였으나, 일본이 한국경제에 관해 생산해낸 단행본은 무려 84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일제에 의한 식민지통치시대에도 그대로 이어져, 식민지(조선)인이 주체가 되어 생산해낸 일본경제 관련 단행본은 전무한 반면, 일본은 600종이 넘는 조선경제에 관한 단행본을 생산하였다. 이처럼 구한말시대부터 식민지시대에 이르는 20세기 전반은, 식민지 조선이 일본경제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일본에 의한 한국경제연구가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던 시기였다.<sup>31)</sup>

31) 이러한 일본에 의한 조선경제연구를 세부 시기별로 분석해 보면,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흥미로운 행태가 발견된다. 가령, 통감부 설치(1905년)이후 한일합방(1910년)전까지 5년 동안 무려 439종의 단행본이 생산되었는데, 이 시기는 일본이 통감부를 앞세워 조선을 일본의 자본주의 발달을 위한 원자재와 식량의 공급지이자 상품의 판매시장으로 삼고자 하던 때였다. 따라서 이 시기에 생산된 대부분의 단행본이 조선의 토지와 자원 그리고 농산품에 대한 현황을 조사한 것으로, 조선의 경제구조를 식민지체제로 바꾸려했던 일본이 절실히 필요로 했던 자료였다. 이러한 행태는 식민지시대에 생산된 단행본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가령, 한일합방직후 10년 동안은 단행본의 생산이 비교적 소원하였으나,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단행본의 생산 규모가 급격히 늘기 시작하여 1940년까지 (태평양전쟁과 함께 일본이 본격적인 전시체제로 돌입하기 직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이러한 현상은 1920년대 이전까지는 경제침탈을 위해 통감부 시절에 생산했던 각종 현황자료들을 활용해 왔으나, 1920년대로 접어들면서부터는 본격적인 경제수탈을 위해 조선의 경제현황에 대한 새로운 자료를 필요로 했던 일제의 사정을 여실히 반영한다. 더불어, 1941년부터 1945년까지 단행본의 생산량이 급감하는 것은 전시동원체제에 들어간 일본이 조선경제연구를 위한 여력을 갖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解放(일본의 입장에선 終戰)직후부터 1965년까지의 국교단절기에는 한일 양국 모두 상대국의 경제에 대한 관심을 가질만한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1946년부터 1965년까지 한일 양국이 서로의 경제에 대해 생산해낸 단행본은 한국이 10종 일본이 3종으로 모두 13종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단행본이 일본의 단행본보다 많이 생산된 것으로 나타나, 한국 경제학자나 경제인들 사이에 일본경제의 고도성장에 대한 관심은 대단히 높았음을 짐작하게 한다. 상대적으로, 舊식민지였으며 대미원조에 의존하고 있던 한국경제에 대한 일본의 관심은 매우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sup>32)</sup>

국교단절시기에 미미했던 단행본의 생산량은 1965년 한일회담의 타결과 함께 한일간 경제 교류가 공식화되면서 점차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1966년부터 1975년까지 10년 동안 한일 양국이 생산한 단행본은 80여종에 이르렀으며, 그 다음 10년 동안(1976년부터 1985년까지)에는 무려 3배가 넘는 260종의 단행본이 생산되었다. 이러한 단행본의 생산량 증가는 한일 양국의 경제교류가 1970년대를 거쳐 1980년대로 접어들면서 대단히 긴밀해졌음을 여실히 보여 준다. 실제로 경제발전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던 한국정부에게 일본의 경제성장은 경각심의 대상이자 매력있는 연구의 대상이었고, 상품의 수출시장과 자본의 투자대상을 찾고 있던 일본에게 한국은 주요한 교역국이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 나타나는 단행본의 생산 증가가 주로 한국에 의해서 주도되었다는 점은 여러 가지를 시사한다. 구체적으로, 1966년부터 1985년까지 생산된 343종의 단행본 중에서, 한국이 240종을 생산한데 비해 일본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03종에 머물렀다. 특히, 1980년대 전반에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는데, 1981년부터 1985년 사이에 한국에서 생산된 단행본은 139종으로 일본에서 생산된 44종의 3배를 넘었다. 이러한 양국의 생산량 차이는 당시 양국의 경제관계를 그대로 반영한다. 1970년대와 1980년대 중반에 걸쳐 한국경제는 상당 부분 일본에 의존하고 있었다. 이러한 대일의존 현상은 양국간 무역 규모에서도 그대로 나타나, 이 시기 한국 무역의 30%내외가 일본과의 교역에 집중되어 있었다. 당연히 일본경제

32) 이 시기에 간행된 단행본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연구자의 이러한 짐작이 틀린 것이 아님이 드러난다. 1965년에 한일경제공동조사단에 의해 한일 양국에서 동시에 생산해낸 『한일경제협력의 방향과 그 배경』을 제외하면, 일본이 단독으로 생산한 단행본은 한국전쟁 중에 日本 通商産業省에서 생산한 『韓國貿易の手引』(1951년)과 한일기본조약이 체결되던 해에 외무성경제국에서 생산한 『韓國の工業所有權關係法』(1965년)이 전부였다. 반면, 한국이 생산한 단행본은 이필석의 『전후일본경제의 부흥상』(1954년), 김용기의 『한국이 본 일본경제』(1962년), 한국은행에서 생산한 『일본의 식량관리제도의 변천』(1962년), 대한무역진흥공사에서 생산한 『일본의 섬유산업』 등으로, 주로 일본경제발전 상황을 소개하거나 산업현황을 분석한 자료였다. 이러한 일본경제에 대한 한국의 관심은 이 시기에 생산된 학술논문에서도 보다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이 시기에 간행된 『思想界』 등의 종합잡지를 살펴보면 일본경제의 고도성장 요인을 분석하거나 일본경제의 진출을 경계하는 논문들이 많이 발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논문들은 1960년대 후반에도 지속적으로 생산되는데, 1970년대 들어서면서 차츰 단행본의 형태로 집성되어 출판되기 시작하였다.

는 한국의 경제학자나 경제인들에게 있어 주요한 연구대상이었다.<sup>33)</sup>

한일 양국의 상대국 경제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대대적으로 확대되는 1980년대 후반부터 2000년까지의 최근 15년에는,<sup>34)</sup> 한일 양국이 생산한 단행본의 차이가 더욱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1980년대 후반부터 2000년까지 한일 양국에서 생산된 단행본은 무려 1,123종이었는데,<sup>35)</sup> 한국이 생산한 단행본이 880종에 이른다 비해 일본은 약 ¼에 불과한 243종을 생산하였다. 이러한 통계는 1980년대 후반을 지나 1990년대에 이르면서, 한국에서의 일본경제연구가 일본에서의 한국경제연구를 계량적인 면에서 확실하게 압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解放이후만을 놓고 볼 때, 한국에 의한 일본경제연구는 일본에 의한 한국경제연구에 비해 축적된 연구량이 월등히 많았으며, 특히, 1980년대 후반부터는 연구내용 또한 다양해지고 성숙해지고 있음을 느끼게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구팀의 결론은 어디까지나 단행본의 생산량에 따른 계량적인 분석에 불과하며, 한일 양국이 상대국의 경제에 대해 얼마나 체계적으로 연구하였는지는 생산된 단행본의 내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비로소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부터 한일 양국이 생산한 단행본의 주제별 현황과 내용적 특성에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자.

## 4.2 주제별 현황과 특성

<표 5>는 1945년 이후 경제분야에서 한일 양국이 서로에 대해 생산한 단행본을 주제별로 정리해 놓은 것이다.<sup>36)</sup> 주제별 현황에서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한일 양국 모두 상대국의 대외경제보다는 국내경제에 대해 보다 큰 관심을 보였다라는 사실이다. 상대국의 경제 정책이나 경제동향 등에 관해 생산한 단행본이 상대국의 대외경제에 관해 생산된 단행본보

33) 1980년대로 접어들면서 한국에선 대외지향형 중화학공업화 정책이 추진되었고, 중화학공업화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자본과 기술 그리고 원료를 구조적으로 일본에 의존하여야 했던 한국으로서는 일본경제연구에 보다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低成長期로 접어들면서 축적해 놓은 막대한 자본의 해외투자를 추진하던 일본에게 한국경제는 연구해야할 국제경제 중에서 작은 부분에 머물러 있었다.

34) 1980년대 후반부터 한일경제관계는 以前과는 다른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한국은 1980년대 말의 3저 현상에 힘입어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마침내 1990년대 중반에 OECD에 합류하나, 일본은 고도성장을 통해 축적한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섰다가 1990년대 들어 버블경제가 붕괴하면서 장기적인 불황에 빠져든다. 이 시기에는 특히, 한국과 일본의 무역경쟁이 여러 산업분야에서 본격화되며, 세계경제의 지역주의 경향이 강해지면서 한일간 경제관계도 양자 경쟁체제에서 다자간 경쟁체제로의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하였다.

35) 이러한 수치는 1945년 이후 한일 양국에서 생산된 전체 단행본의 75%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36) 한국에 의한 일본경제연구가 전무한 것으로 조사된 1945년 이전에 일본에 의해 생산된 단행본 단행본 714종은 비교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 시기에 생산된 단행본을 주제별로 분석하면, 식민지시대의 경제현황조사(340종), 경제동향분석(186종), 경제정책(77종), 경제사(33종), 경제단체(27종), 경제법(18종), 경영전략(11종), 경제인(4종), 경영이론(1종) 등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생산된 단행본의 대부분이 당시 조선의 경제현황과 동향을 조사하거나 분석한 자료였고, 조선의 경영을 위한 각종 경제정책에 관한 자료가 뒤를 이었다.

다 월등히 많았다.

두 번째 특징은 상대국의 경제에 관한 한국과 일본의 관심영역이 뚜렷하게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이다. 가령, 한국이 생산한 단행본의 약 34%가 일본의 각종 경제정책에 대한 조사와 분석에 집중되어 있는데 비해, 일본이 생산한 단행본의 약 36%는 한국의 경제동향이나 현황 파악에 집중되어 있었다.

<표 5> 경제분야 단행본의 주제별 통계 (1945년 이후)

연구주제	생산종수		연구주제	생산종수	
	한국	일본		한국	일본
경제정책	392(34%)	53(15%)	경영이론	10(0.9%)	0(0%)
경제동향·현황	166(15%)	159(45%)	경영전략	89(7.8%)	3(0.9%)
경제사	18(1.6%)	23(6.5%)	한일관계	207(18%)	51(15%)
경제법	20(1%)	9(2.5%)	국제관계	181(16%)	39(11%)
경제인·단체	11(1.8%)	6(1.7%)	북한관계	1(0.1%)	4(1.1%)
경제이론	39(3.4%)	4(1.1%)	합계	1,137(100%)	351(100%)

통계에서 발견할 수 있는 또 하나 흥미로운 특징은, 한국과 일본의 경제관계(특히, 무역 및 통상관계)에 대한 한국의 관심은 매우 컸으나 일본의 관심은 상대적으로 작았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상대국의 대외경제에 관한 연구물의 통계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 한국이 일본의 대외경제정책과 현황에 커다란 관심을 보인데 비해, 일본은 한국의 대외경제정책과 현황에 대한 상대적으로 작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렇듯, 한국과 일본은 자국의 경제적 관심과 한일관계를 포함한 국제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각국이 생산해낸 단행본의 내용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였는데, 양국이 생산해낸 단행본은 그 내용에 있어 어떠한 특징과 차이를 보이는데 대해 좀더 상세히 분석하였다.

① 한국이 생산한 단행본의 주제별 분석

1945년 이후 한국이 생산한 단행본의 주제별 현황을 살펴보면, 일본경제에 대한 한국의 연구가 상당히 다양하고 폭넓게 수행되어 왔음을 느끼게 된다. 일본의 국내경제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일본의 대외경제에 대해서도 상당량의 연구가 축적되었는데, 한국이 생산한 1,137종의 단행본 중에서 일본의 국내경제를 다룬 단행본이 745종이었고, 대외경제를 다룬 단행본이 392종이었다.

먼저, 일본의 국내경제를 다룬 단행본의 경우 절반이 넘는 자료가 경제정책(392종)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특히, 산업정책에 관한 단행본이 222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외에 통상 혹은 무역정책을 비롯하여 기업, 금융, 재정, 노동, 자원, 복지, 기술분야의 정책과 제도에 관한 연구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다.<sup>37)</sup> 이러한 경제정책 관련 단행본의 생산시기는 한국에서 관련분야에 대한 정책입안의 필요성이 대두되던 시기와 대부분 일치하여, 일본경제가 한국경제발전의 실용적 모델이 되어왔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경제정책 다음으로 많은 단행본이 생산된 주제영역은 일본의 경제현황을 조사하거나(83종) 경제동향을 분석한(83종) 자료였다. 이러한 단행본 역시 산업별 현황이나 동향에 관한 것이 가장 많았으며, 각종 기업의 현황과 시장의 동향에 관해 조사한 자료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sup>38)</sup> 이러한 단행본의 주제별 현황은 한국에서의 일본경제연구가 매우 실용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음을 짐작하게 하였는데, 이러한 실용적 특성은 일본의 경제법규를 연구한 단행본이 20종이나 생산되었다는 사실에서 확연하게 나타났다.<sup>39)</sup>

그렇다고 해서 일본경제를 실용적인 차원에서만 연구한 것은 아니었다. 이론적 관점에서 일본경제를 체계적으로 연구한 단행본이 39종이나 생산되었으며,<sup>40)</sup> 일본의 경제발전과정을 역사적 관점에서 분석한 단행본도 20종이 생산되었다.<sup>41)</sup> 이러한 단행본들은 대개 일본경제를 '소개'하거나 '비교'하거나 혹은 '관계'적 차원에서 논의하는 단계를 넘어 독립적인 관점에서 일본경제를 연구한 것으로, 한국의 일본경제연구가 '따라하기' 혹은 '교훈찾기'의 단계를 넘어 성숙한 단계로 접어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일본의 국내경제에 관한 단행본 중에는 일본기업의 성공사례를 경영학적 관점에서 분석한 단행본이 무려 100종 가까이 있었다.

이들의 대부분은 특정 기업의 경영전략을 소개하는 내용이었으나, 경영이론적 관점에서 일본식 경영을 체계적으로 연구한 단행본도 10종이나 생산되어 이론적인 연구의 축적 또한 만

37) 일본의 경제정책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한국투자개발공사의 『일본의 증권정책』(1969),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의 『일본의 산업정책』(1979), 노성호의 『일본의 지역산업 진흥정책』(1992) 등을 들 수 있다.

38) 일본의 경제동향과 현황을 분석한 연구로는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의 『최근의 일본 경제와 산업, 기술 동향』(1984), 산업연구원의 『일본 레저산업의 동향과 전망』(1987), 대한무역진흥공사의 『일본의 산업디자인 현황』(1990), 한국무역협회의 『일본의 상품별 시장 동향』(1992), 농촌진흥청의 『일본의 최근 농림수산업 동향』(1996) 등이 있다.

39) 일본의 경제법규 및 제도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한국무역협회의 『일본의 수입규제와 관계법규』(1978), 한국관세연구소의 『일본관세법』(1983), 국세청의 『일본의 국제조세제도』(1989), 한국관광공사의 『일본 관광관계법』(1993), 법무부의 『일본의 공증제도』(1996) 등이 있다.

40) 일본경제에 대한 이론적 연구로는 안병직·정영일의 『일본경제의 근대화』(1990), 안림의 『일본국가독점 자본주의』(1990), 강영수의 『일본경제론』(1991), 권혁기 등의 『일본형 자본주의』(1993), 강신준의 『일본 자본주의 분석』(1996) 등이 있다.

41) 일본의 경제발전사에 관한 연구로는 한국산업기술연구원의 『일본 통상산업 30년』(1982), 조규하의 『일본 경제: 그 발전과정과 요인』(1987), 대한무역진흥공사의 『달리는 일본, 쫓기는 일본; 일본 산업의 성장사: 명치유신에서 21세기까지』(1994), 강태현의 『일본 전후 경제사』(2000) 등이 있다.

만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sup>42)</sup>

특히, 일본식 경영을 주제로 한 단행본들은 1980년대 말까지는 주로 ‘일본식 경영’의 성공 요인을 분석하는 내용이었으나, 1990년대 들어 일본이 장기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오히려 일본식 경영의 한계와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단행본을 생산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한편, 일본의 대외경제를 다룬 단행본은 크게, 일본 대외경제의 기본 정책과 전반적 현황을 다룬 연구(181종)와 韓日경제관계를 중점적으로 다룬 연구(207종)로 나누어진다. 먼저, 대외경제관계에 대한 단행본은 일본의 경제협력, 자본투자, 경제원조 등의 현황과 정책을 주로 다루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1990년대 후반이후 급격하게 진행된 일본경제의 국제화 특히 일본기업의 아시아 진출과 관련한 연구가 이 분야를 연구하는 한국경제학자들의 주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었다.<sup>43)</sup>

韓日 경제관계를 다룬 단행본 중에는 ‘일본경제의 변화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적’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112종)가 가장 많았으며, 특히, 한일간 경제적 현안인 무역역조 문제를 비롯한 통상관계가 연구의 중심에 놓여있었다.<sup>44)</sup>

이에 더하여, ‘일본경제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하는 목적’에서 한일경제를 비교하는 연구(42종)도 적지 않은 양이 생산되었다.<sup>45)</sup> 그리고 1990년대 후반부터는 탈냉전으로 야기된 국제경제의 지역주의화 현상과 관련하여 한일 양국의 경제협력 방안을 다룬 단행본도 하나 둘씩 생산되고 있다.<sup>46)</sup>

42) 경영이론적 관점에서 일본을 연구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한국경영자협회의 『일본기업의 인사관리와 노사관계』(1975), 안태호·임상희의 『일본적 경영의 원리와 실천』(1986), 이관희의 『일본적 경영철학과 실제』(1988), 강영수의 『일본경영론』(1991), 김영문의 『일본식 경영』(1994) 등이 있다.

43) 대한무역진흥공사의 『일본의 중남미진출 현황분석 : 교역, 투자진출 및 경제협력을 중심으로』(1987), 김연석의 『일본 경제·무역의 분석 : 한국경제를 위한 교훈의 모색』(1993),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엔고하에서의 일본기업의 대응실태와 시사점 : 대아시아 직접투자를 중심으로』(1994) 등이 이러한 경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연구이다.

44) 만성적이고 구조적인 대일 무역 적자를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문제는 한국경제가 맞닥뜨린 가장 장기적 이면서 현실적인 과제였다. 대일 무역역조 문제는 이처럼 한일경제관계를 연구하는 한국학자들의 단골 주제였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류관영의 『일본의 무역장벽과 대일역조』(1981), 대한상공회의소의 『미일 산업 공동화의 진전과 한국의 전략』(1988), 홍유수의 『일본의 대아시아 기술이전 전략과 한국의 대응』(1993), 이근의 『일본의 수입촉진정책 : 평가 및 한국의 대응방향』(1999) 등이 있다.

45) 대표적인 연구로는 한국경제연구소의 『수출진흥을 위한 일본경제연구』(1969), 대한상공회의소의 『한국, 제2의 일본인가 : 한국과 일본은 어떻게 다른가』(1987)와 『한국과 일본기업의 해외직접투자전략 비교연구』(1993), 이해주의 『한국경제발전론 : 한일비교경제사적 접근』(1996) 등이 있다.

46) 대표적인 연구로는 김인중의 『최근의 엔고 영향 분석과 한·일 산업 협력』(1993), 최성일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 한일경제협력의 방향』(1995),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의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현상과 가능성』(2000) 등이 있다.



## ② 일본이 생산한 단행본의 주제별 분석

일본이 1945년 이후 생산해낸 단행본의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경제에 대한 일본의 관심은 한국이 일본경제에 대해 가졌던 관심만큼 크지도 다양하지도 않았음이 드러난다. 일본이 생산해낸 단행본 중에서 한국경제의 동향이나 현황을 조사한 자료가 전체의 절반을 넘을 정도로 일본의 한국경제연구는 現狀 중심적이고 事案 중심적이었다.<sup>47)</sup> 이에 비해, 한국경제를 학술적이고 이론적 관점에서 연구한 단행본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았다.<sup>48)</sup>

경제동향이나 현황을 다룬 단행본 이외에, 국내경제를 주제로 한 단행본은 모두 98종이었다. 이 중에는 경제정책을 다룬 단행본이 53종으로 가장 많았고, 경제사(23종), 경제법(9종), 그리고 경제인이나 경제단체를 소개한 단행본(6종)이 뒤를 이었다. 이들 중 적지 않은 자료가 학술적 단행본으로 보기에는 어려웠는데, 특히, 경제정책을 다룬 단행본의 대부분은 한국의 경제개발계획이나 투자유치정책과 같은 각종 정책을 소개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sup>49)</sup> 물론 한국의 산업정책이나 통상정책 혹은 재정정책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단행본도 발견할 수 있었으나 이러한 전문 연구저서는 10여 종에 불과하였다.<sup>50)</sup>

한편, 한국의 대외경제를 연구하여 생산한 단행본은 모두 90종이었는데, 한일경제관계를 다룬 단행본(51종)과 전반적인 국제경제관계(39종)으로 구분되었다. 한일경제관계를 다룬 단행본 중에는 한국경제의 동향을 분석한 것이 가장 많았고(17종), 한일간 경제협력(13종), 한일간 경제비교(6종), 한일간 경제마찰(4종), 한국의 혹은 한국에 대한 투자(3종)에 관한 단행본이 뒤를 이었다.<sup>51)</sup> 국제경제관계를 다룬 단행본 중에는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경제를

47) 구체적으로, 일본이 생산한 351종의 단행본 중에서 한국경제의 동향이나 현황을 분석한 단행본이 모두 183종에 이르렀다. 이에 해당되는 연구로는 植木 瑠の『韓國の金融事情』(1969), 日本貿易振興會海外經濟情報センター의『韓國財閥グループの現状』(1981), 上杉義正의『韓國經濟が危ない』(1989), 谷浦孝雄의『21世紀の韓國經濟 課題と展望』(2000) 등이 있다.

48) 한국경제이론에 대해 연구한 단행본은 4종에 불과하였다: 小林英夫의『「韓國」經濟における新植民地主義の新たな局面』(1979), 梶村秀樹의『朝鮮における資本主義の形成と展開』(1985), 本多健吉의『韓國資本主義論』(1990), 深川由起子の『韓國・先進國經濟論 成熟過程のミクロ分析』(1997).

49) 이러한 경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단행본은 三和銀行의『海外投資ガイド: 韓國』(1986), 日本商工會議所の『海外投資 韓國の投資の手引き』(1990), 日韓經濟協會의『韓國新經濟5カ年計劃 參與と創意で新たな跳躍を1993-1997』(1993) 등이 있다.

50) 한국의 경제정책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로는 窪田光純의『韓國の農地改革と工業化發展』(1988), 權泰殷의『韓國會計制度論 會計基準の繼受に關する研究』(1989), 岸眞清의『經濟發展と金融政策 韓國 タイの經驗と日本』(1990), 金子逸郎·百瀬惠夫·岡本喜裕의『韓國經濟—企業の發展と現状』(1999) 등이 있다.

51) 한일관계를 다룬 단행본 중 경제동향이나 현황에 관한 연구로는 總合研究開發機構의『國際環境變化の下での日韓經濟』(1988), 沈晚變의『韓國經濟の展望と日本』(1993) 등이 있으며 한일간 경제협력에 관한 연구로는 日韓經濟共同調査團의『日韓經濟協力の方向とその背景』(1995), 通商産業省의『機械工業における日本と韓國の國際分業の展望』(1987) 등이 있다. 또한 한일간 경제비교에 관한 연구로는 森谷正規의『日本・中國・韓國産業技術比較』(1980), 日本貿易振興會의『韓國のワイヤーロープ産業と日本と競合』(1986) 등이, 한일간 경제마찰에 관한 연구로는 松本厚治의『日韓經濟對察—韓國エコノミストとの論争』(1986), 石田賢의『日韓産業對察』(1987) 등이, 그리고 한국의 혹은 한국에 대한 투자에 관한 연구로는 末渡의『日本企業の對韓投資要覽 企業概況及び財務現況』(1990), 富士總合研究所의『活發化する韓國企業の對韓投資 日本企業の對韓投資戰略への影響』(1997) 등이 있다.

비교한 연구를 비롯하여(10종), 경제투자(9종), 경제동향(7종) 등에 관한 연구를 찾아 볼 수 있었다.<sup>52)</sup> 이처럼, 한국의 대외경제에 관한 단행본의 대부분은 경제동향을 분석하거나 현황을 비교하는 유형의 실용적 목적에서 생산된 자료였다.

### 4.3 생산주체별 현황과 특성

단행본의 생산주체를 분석해 보면, 단행본의 생산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늠해 보는 것이 가능하다. <표 6>은 1945년 이후 경제분야에서 한일 양국이 서로에 대해 생산한 단행본을 생산주체별로 정리해 놓은 것이다.<sup>53)</sup> 표에서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한국과 일본이 생산주체의 성격에 있어서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경우는 정부기관과 국책연구기관 그리고 공사나 공단 등이 생산한 단행본이 전체 생산량의 55%에 이를 정도로 국가의 역할이 컸으나, 일본의 경우는 전체 단행본의 약 90%가 개인 연구자나 민간경제단체 등에 의해 생산되었을 정도로 민간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sup>54)</sup> 한일 양국의 생산주체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이러한 경향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표 6> 경제 관련 단행본의 생산주체별 통계 (1945년 이후)

생산주체	생산종수		생산주체	생산종수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행정기관	126(11%)	11(3.1%)	민간연구기관	125(11%)	21(6%)
정부산하기관*	138(12%)	20(5.7%)	민간금융기관	49(4.3%)	5(1.4%)
입법관련기관	16(1.4%)	0(0%)	개인 연구자	167(15%)	198(56%)
국책연구기관	343(30%)	3(0.9%)	기타	28(2.5%)**	22(6.3%)**
경제협회/단체	145(13%)	72(20%)	합계	1,137(100%)	351(100%)

\* 한국의 대한무역진흥공사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일본의 국제협력사업단과 같은 공사나 공단들

\*\* 생산주체가 미상이거나 명확하지 않은 단행본

52) 국제관계를 다룬 대표적인 단행본으로는 橋本秀一의 『追い上げられる日本 ここまで来たアジア四強の實力』(1978), 村田喜代治의 『工業の空間構造 中國・韓國・日本の比較』(1987), 林田正人の 『台灣と韓國の企業行動比較 經濟發展政策が企業經營に與えたインパクト』(1993), 金融情報システムセンター의 『アジア諸國における金融情報システムの現状と課題』(1995) 등이 있다.

53) 한국에 의한 일본경제연구가 전무하였던 1945년 이전에 일본에 의해 생산된 단행본 714종은 비교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 시기에 생산된 단행본의 주요 생산주체는, 중앙행정기관(조선총독부 포함, 275종), 지방행정기관(33종), 경제관련단체(51종), 개인 연구자(272종), 기타(83종) 등으로 파악되었다.

54) 이와는 대조적으로, 일본이 한국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던 1901년부터 1945년 사이에 생산된 단행본의 약 50%가 조선총독부를 비롯한 일본의 국가기관에 의해 생산된 것이었다.

먼저, 한국의 경우, 산업연구원이나 대외정책연구원과 같은 국제연구기관에 의해 생산된 단행본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뒤를 이어, 개인연구자 그룹, 한국무역협회나 상공회의소와 같은 경제협회나 단체, 대한무역진흥공사나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같은 정부산하기관, 경제기획원이나 농촌진흥청과 같은 중앙행정기관, 삼성경제연구소나 현대경제사회연구원과 같은 민간연구기관, 한국산업은행이나 한국외환은행과 같은 금융기관, 그리고 국회도서관이나 국회사무처와 같은 입법관련기관의 순서로 많은 단행본을 생산하였다.

이들 생산주체의 정체에 따라, 이들이 생산해낸 단행본의 성격에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 가령, 행정기관이나 정부산하기관 그리고 경제단체와 협회 등에서 생산한 단행본은 관련 분야의 현황이나 동향을 조사한 보고서 형태의 자료가 가장 많았으며, 이외에 관련 법령과 특정 제도에 대한 해설, 그리고 각종 산업과 기업 등에 대한 안내서나 편람 형태의 자료가 많았다.<sup>55)</sup> 이처럼, 이들 기관에 의해 생산된 단행본은 대부분 실용적인 목적에서 만들어진 자료라는 특성을 보였다.

이에 비해, 국제연구기관이나 민간연구기관에서 생산한 단행본은 일본 국내경제의 전반적 혹은 산업별·기업별 동향과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 추이를 전망하는 내용과, 일본경제의 대외정책을 분석하여 한일간 경제관계나 국제경제관계의 측면에서 관련 분야의 대응방안과 전략을 제시하는 내용이 많았다. 이러한 단행본들은 산업, 통상, 금융, 재정, 노동, 복지, 기술 등 다양한 주제와 관련된 懸案을 중심으로 관련분야의 전문가들에 의한 체계적인 조사와 분석을 담고 있어, 국가차원의 對日 경제정책을 입안하는데 주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sup>56)</sup>

개인 연구자에 의해 출판된 단행본의 대부분은 대학이나 경제 관련 연구소에 소속된 경제 전문가에 의해 생산된 것이었다.<sup>57)</sup> 이들 개인 연구자에 의한 단행본의 80%이상은 1990년대

55) 행정기관 및 정부산하기관에서 생산한 단행본으로는 경제기획원의 『일본신국민경제체제 연구보고서』(1979), 국토통일원의 『일·북한 무역(경제교류)의 현황과 전망』(1986), 재무부의 『일본의 금융정책: 전후 금융정책의 발전』(1993), 노동부의 『일본의 중소기업 퇴직금공제제도 해설』(1995) 등이, 그리고 경제단체 및 협회에서 생산한 단행본으로는 한국경영자협회의 『일본기업의 인사관리와 노사관계』(1975), 대한손해보험협회의 『일본의 손해보험』(1983), 한국무역협회의 『일본의 산업별 환경정책과 전망』(1994) 등이 있다.

56) 국제연구기관 또는 민간연구기관에서 생산한 단행본은 한국무역연구소의 『일본의 무역정책에 관한 연구: 한일무역수지의 개선을 위하여』(1972), 국제경제연구원의 『일본의 아·태평양지역진출현황과 전망』(1978), 한국경제연구원의 『환율변동에 따른 한일의 산업 및 무역구조의 변화』(1987),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한미일 산업구조적 특성이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1993), 신한종합연구소의 『일본보고서』(1998) 등이 있다.

57) 이 연구에서는 분석대상에 경제학자가 아닌 비전문가들이 자신의 경험에 기초하여 일본경제를 소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생산한 단행본을 일부(10여종) 포함하였다. 이러한 내용의 단행본은 전문성과 학술적 가치는 부족하지만, 일본경제에 대한 한국의 관심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실용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단행본은 일본의 경제문화나 제도를 이해하고자 할 때나 일본과 관련된 기업활동을 하고자 할 때 유익한 자료였으며, 대부분이 1990년대 중반이후 생산되었다. 이에 해당되는 단행본은 권혁기·이지평의 『일본에서는 일본식으로: 선진기업의 일본시장 진출 성공사례』(1994), 정몽준의 『일본의 정부와 기업관계: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1995), 최성자의 『우리가 죽어도 못따라 잡는 일본인의 판매비법 77가지』(1998) 등을 들 수 있다. 일본이 생산한 유사한 내용의 자료들도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

에 생산된 학술저서로서 장기간에 걸친 체계적인 연구성과를 담고 있었다.<sup>58)</sup> 이들의 내용은 일본의 거시경제에서부터 노사관계나 재벌과 같은 특정 분야 그리고 일본식 경영에 대한 분석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였으며, 이론적인 접근과 객관적인 해석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였다.<sup>59)</sup> 특히, 1990년대에 생산된 단행본들은 경제학자들의 단골 메뉴였던 한일경제에 대한 비교나 무역역조관계 등을 연구한 것보다 일본경제를 독립적으로 연구한 것이 많았는데, 이처럼, 이 시기에 접어들면, 한국에서의 일본경제연구가 실용적 단계를 넘어서 보다 전문적인 수준에 이르러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sup>60)</sup>

한편, 일본의 경우에는 행정기관이나 정부산하기관에 의해 생산된 단행본은 34종으로 전체의 20% 정도에 불과했으나, 개인 연구자에 의해 생산된 단행본(198종)이 전체의 60%에 육박할 정도로 개인 연구자들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한 흥미로운 현상은 한국에서는 국책연구기관의 활동이 매우 활발하여 전체 단행본 생산량의 30%를 넘었으나, 일본에서는 국책연구기관이 생산한 단행본이 단 3종에 불과하였다는 점이다. 민간연구기관의 활동 또한 한국에 비해 빈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민간연구기관이 생산한 단행본은 모두 21종에 불과하였다.<sup>61)</sup>

그러나 일본무역진흥회나 일본경제협회와 같은 경제단체의 활동은 비교적 활발하여 개인 연구자 다음으로 많은 72종의 단행본을 생산하였다.

일본에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생산주체의 정체에 따라 이들이 생산해낸 단행본의 성격에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 정부기관이나 경제단체(협회) 등에서 생산한 단행본들은 대부분 실용적인 목적의 자료였는데, 한국경제의 현황이나 동향을 실무적 차원에서 조사한 보고서를 비롯하여 경제관련 법규나 요람 혹은 편람 등이 많았다.<sup>62)</sup>

이에 비해, 민간연구기관에 의해 생산된 단행본은 한국경제의 현황과 실태 그리고 구조와 제도 등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 단행본은 대부분이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생산된 자료로서 1990년대에 생산된 최근 자료는 찾아보기 힘들었

58) 일본경제에 관한 단행본을 활발하게 생산한 대표적인 학자로는, 강영수, 김도형, 김영명, 김용기, 박태건, 안풍모, 이종윤, 이종훈, 임천석, 임호규, 조규식, 조규하, 조동성 등이 있다.

59) 이러한 유형의 연구로는 강영수의 『전후 일본경제론, 1945-1986년』(1987), 이종훈의 『일본 경제론: 과거·현재·미래』(1993), 조동성의 『한일산업정책 비교연구』(1997) 등이 있다.

60) 1990년대에 일본경제를 연구하여 박사학위를 받은 소장 학자들만 30여명에 이르며, 이들 중 70% 이상이 일본에서 학위를 받았을 정도로 일본경제를 연구하는 한국학자들의 전문성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61) 민간연구기관 중에서는 아시세경제연구소의 활동이 단연 두드러졌는데, 21종 중에서 16종이 이 연구소에 의해서 생산된 것이었다.

62) 정부기관에서 생산한 대표적인 단행본으로는 在大韓民國日本大使館의 『韓國の投資環境』(1971) 등이 있으며, 각종 경제단체에서 생산한 단행본으로는 日韓經濟協會의 『韓國主要經濟法規シリーズ』(1969), 海外技術協力事業團의 『韓國農業開發計畫調査報告書』(1972), 大阪商工會議所の 『韓國の付加價値稅』(1984), 日本貿易振興會의 『アジア地域における韓國企業の主要プラント事業展開の現状と問題點』(1990) 등이 있다.

다.63)

개인 연구자들이 생산한 단행본은 대부분 학술저서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의 단행본과 비교할 때, 소수를 제외하고는 연구내용의 전문성과 다양성 그리고 최신성이 부족해 보였다. 개인 연구자에 의한 단행본은 주로 한국의 경제개발정책과 발전 과정을 소개하거나, 한국의 산업화 과정을 경제사적 관점에서 논의하거나, 국제경제 특히 동아시아 경제의 테두리 안에서 일본경제와 관련하여 한국경제를 조망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64)

이처럼, 현대 한국경제를 거시적이고 미시적인 관점에서 독립적으로 연구하는 분위기는 상대적으로 빈약해 보였으며, 특히, 한국경제에 대해 이론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한 연구저서는 드물었다.

이러한 현상은 주로 한국경제에 대한 일본경제학자들의 상대적인 경시풍조와 관심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시기별 현황에서 나타났듯이, 한국의 비약적인 경제성장에 대한 일본의 위기의식이 팽배해 지던 1980년대 후반에 잠시 단행본의 생산이 늘어나지만, 1990년대에 접어들면 다시 감소하여 同 時期에 한국이 생산한 단행본의 1/5에 불과해지는 사실은 이러한 정황을 여실히 보여준다.

일본의 경우, 한국경제를 '전공'영역으로 삼고있는 학자는 소수에 불과하였으며, 한국경제를 주제로 하여 여러 종의 단행본을 출판한 학자들조차 주요 전공은 국제경제학 혹은 아시아경제학이면서 한국경제에 관심을 갖고 저술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현황을 확인하면서, 일본에서의 한국경제연구는 아직 경제학 연구의 독립적인 영역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65)

63) 민간연구기관에 의해 생산된 대표적인 연구로는 아시아經濟研究所의 『1960年代韓國製造業の發展 その統計的分析』(1975), 三菱總合研究所의 『變貌する韓國經濟』(1981), 野村總合研究所의 『日・米・韓企業の經營戰略 21世紀を切り開く地球型企業群』(1987) 등이 있다.

64) 개인 연구자에 의해 생산된 단행본으로는 池上隆雄의 『韓國近代開發論』(1974), 長谷川慶太郎의 『韓國の經濟』(1978), 中野博季의 『日本が韓國に敗れる日』(1984), 龍澤秀樹의 『韓國の經濟發展と社會構造』(1992), 渡邊利夫의 『韓國經濟入門』(1996) 등이 있다.

65) 일본의 日韓文化交流基金이 집계한 일본의 한국경제전문가 중에서 대학원과정에 재학중인 사람들과 한국인 교수를 제외한 명단은 다음과 같다: 加藤光一, 間部洋一, 岡本喜裕, 高秉雲, 谷浦孝雄, 宮塚利雄, 權泰殷, 原久仁夫, 鈴木滿直, 龍澤秀樹, 木下徹弘, 島倫八, 城戸宏史, 須川英徳, 市原博, 新納豊, 野律和功, 魏在均, 立花敏, 章大寧, 住田紘, 中嶋眞治, 中林吉幸, 中西正行, 坂木悠一, 坂田幹夫, 坂下明彦, 確井和弘, 横田伸子, 後藤浩.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경제이론이나 경영이론 혹은 경제정책이나 국제경제학 전공자이며, 스스로 한국경제 전공이라고 밝힌 사람은 단 3명에 불과하였다.

## 5.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 우리는 20세기에 한국과 일본이 서로의 정치와 경제에 대해 연구하여 생산한 지식정보의 현황과 특성을 3,000여종의 단행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 연구를 통해 우리는 정치와 경제분야에 있어서 한국에서의 일본연구가 일본에서의 한국연구에 비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결코 뒤지지 않았다는 ‘흥미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이 국가 대 국가로서의 대등한 관계를 회복한 1945년 이후에 생산된 단행본을 대상으로 할 때, 한국의 일본연구가 일본의 한국연구를 오히려 앞섰다는 조금은 ‘조심스런’ 결론에 도달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론은 단행본의 생산시기를 1980년대 중반이후로 제한하면 보다 확실해지는데, 경제분야는 물론이고 정치분야에서도 한국의 일본연구는 일본의 한국연구에 비해 계량적인 측면에서는 물론이고 연구의 질적 수준에서도 결코 뒤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연구팀의 조사 결과는 “한국의 일본연구가 일본의 한국연구에 비해 전체적으로 한참 뒤떨어져 있다”는 언론매체의 기존 보도나 일본을 연구하는 한국학자들이 주장과는 상당한 괴리를 보인다. 그러나, 이 글의 앞부분에서 상세히 논의하였듯이, 분명한 것은 20세기의 말로 접어들수록 경제분야는 물론이고 정치분야에서도 한국의 일본연구는 일본의 한국연구를 규모와 전문성에서 앞서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이 연구의 출발점, 즉, “상대에 대한 관심과 상대에 대한 지식정보의 생산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假定에 무게를 더해준다. 이렇듯 한일 양국의 ‘상대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정확히 인식하게 될 때, 한국이 일본을 앞서기 시작했다는 연구팀의 결론은 보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20세기 전반에 일본의 한국연구가 포괄적이고 상세하게 이루어졌던 까닭은 한국에 대한 일본의 관심이 그만큼 컸기 때문이다. 관심이 크다보니 상세히 알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였고, 그러한 일본의 욕구는 조선의 정치와 경제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로 이어져 상당량의 연구물이 축적되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20세기 후반의 양상도 이와 동일한 관점에서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일본에 대한 관심이 컸기에, 특히, 일찍이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선 일본에 대해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컸기에, 나아가, 일본은 따라잡아야 할 목표였고 벤치마킹을 위한 모델이었기에, 한국에서의 일본연구는 한국의 산업화가 진전될수록 더욱 활성화되었던 것이 아닐까? 이에 비해, 終戰이후 짧은 기간 내에 초일류국가의 대열에 다시 들어선 일본은 후진국 한국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던 것은 아닐까? 관심이 적다보니 알고자 하는 욕구도 약했고, 그 결과, 일본에서의 한국정치와 경제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이 아닐까?

이러한 연구팀의 추론은 한일 양국에서 상대국의 정치와 경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

자군의 현황과 특성을 분석해보면 보다 명료해진다. 앞서 생산주체에 대한 조사와 분석 과정에서 논의하였듯이, 1980년대 후반이후 한국에서의 일본정치연구와 경제연구는 일본을 ‘전공’한 젊은 학자들에 의해 주도되어 왔으나, 일본에서의 한국정치연구와 경제연구는 한국에 ‘관심’을 가진 중견 학자들에 의해 주도되어 왔다. 이러한 사실은, 日韓文化交流基金이 파악한 일본의 한국연구자 현황자료에도 나타나듯이, 현재 일본에서 한국정치나 경제에 대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학자의 다수가 在日한국인 출신이거나 일본에 유학한 한국계 학자라는 사실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반면, 한국에서는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일본이나 미국 등지에서 日本을 전공하고 돌아와 ‘지역학’의 차원에서 일본을 독자적인 연구 대상으로 삼고있는 소장 정치·경제학자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들에 의해 일본의 정치연구와 경제연구가 주도되고 있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러할 진데, 한국의 일본연구가 일본의 한국연구를 앞서기 시작한 현상은 자연스런 결과가 아니겠는가?<sup>66)</sup>

문제는 현실이 이러한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데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지식정보의 생산에만 몰두하였지 생산된 지식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 소홀히 한 데서 기인한다. 이 연구의 수행 과정에서 연구팀은 특히 한국에서 생산된 단행본의 서지정보를 파악하는데 무척이나 어려움을 겪었다. 일본과는 달리, 한국이 생산한 단행본에 대한 정보는 이곳 저곳에 방만하게 흩어져 있었다. 지식정보의 관리에 이처럼 소홀하다보니 상당량의 지식정보를 생산해 놓고서도 스스로 얼마나 많은 연구를 해왔는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서도 관념적으로 ‘의례 그렇겠거니’ 하는 선입관에 사로잡혀, 일본에 비해 연구의 양도 부족하고 내용도 열악하다고 스스로를 비판하는데 익숙해 왔던 것이다. 상대를 알고자 그렇게 노력했으면서도 막상 자신의 성장은 간파하는 우를 저질러 왔던 것이다. 심지어 전문 연구자들조차 자신들의 연구가 어느 정도 단계에 이르고 있는지에 대해 무관심하다 보니, 연구대상인 일본의 연구결과를 인용하는 데는 그렇게 열심이면서도 동료들의 연구결과를 인용하는 데는 그렇게 소홀했는지 모른다. 지식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에 무지하

66)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조선일보가 2002년 5월 17일부터 연재하고 있는 ‘한·일경제 역전론’은 이 연구의 결과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을 시사한다. 조선일보 경제팀이 同 기사를 쓰면서 인용한 스위스 국제경제개발원(IMD)의 국가경쟁력 순위에 의하면, 1993년에 한국의 국제경제력은 조사대상 49개국 중에서 28위였고 일본은 2위였으나, 2002년 현재에는 순위가 바뀌어 한국이 27위로 한 단계 오른데 비해 일본은 30위로 추락한 것으로 되어 있다. 기사의 표제 그대로 ‘30년만에 師弟關係가 역전된 것이다. 이 기사는 일본이 한국경제를 배우기 위해 노력하는 사례로 일본기업인의 삼성전자와 이마트 그리고 포스코의 방문 사례를 언급하면서, 근대화이후 한·일경제의 역전 가능성이 지금처럼 고조된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물론, 이 기사는 성급한 논평이라는 반론을 제시하는 경제인들의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아직 허리띠를 더 졸라매어야 한다는 신중론도 펴고 있지만, 전자·조선·철강과 같은 산업분야에서 한국이 일본을 생산규모에서 추월한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필자는 상대에 대한 지식정보의 생산과 상대에 대한 경쟁력의 확보 사이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어느 정도 믿음을 갖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이 기사의 내용은, 비록 보다 많은 이론적 검증을 필요로 하지만, 필자의 이러한 믿음이 주관적 추론에 불과한 것만은 아니라는 사례로 다가왔다.

고 무관심했던 결과이다.

지식정보의 관리에 소홀할 때, 특히,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가 부실 할 때, 과거에 행해진 유사한 연구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동일한 연구를 상이한 주체가 중복적으로 수행하는 현상이 흔히 벌어진다. 이러한 반복 혹은 중복 연구로 인한 낭비는 개인이나 기관은 물론이고 국가적인 손실로 이어진다. 이 연구를 수행하면서 연구팀은 반복 혹은 중복연구로 보이는 많은 자료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물의 저자들은 아마도 서로가 서로의 존재에 대해 모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주제 넘는 걱정을 한 적도 많았다. 연구팀은 또한 관련 분야의 한국 연구자들을 접하면서, 일본정치와 경제를 연구하는 많은 한국연구자들이 연구자료를 여전히 개인적으로 탐색하여 수집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들 연구자들이 자료의 탐색과 수집에 쏟는 시간과 노력을 자료에 대한 분석과 집필에 쏟을 수 있다면, 한국학자들의 연구생산성은 지금보다 배가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식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이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여야 한다. 한국에서의 일본연구, 특히, 정치와 경제분야에서의 일본연구에 있어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설립하여 운영해온 여러 국책연구기관들의 역할이 컸던 것처럼, 국가차원의 지식정보시스템의 구축은 한국의 일본연구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지난 100년 동안 생산된 단행본에 대한 조사와 분석에 그치고 말았지만, 한일관계의 전시대를 대상으로 학술논문은 물론이고 학위논문과 각종 기록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유형의 지식정보를 포괄적으로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식정보시스템을 시급히 구축하여야 한다. 그렇게 될 때 한국은 비로소 일본에 대한 연구의 부족으로 인해 일방적으로 경험하여야 했던 20세기 전반의 불행에서 벗어나, 21세기의 한일관계를 대등한 동반자 관계로 이끌어 가는데 있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체함>